

제429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정기회)

제 6 호

(임 시 회 의 록)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1월11일(화)

장 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2.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 가. 산업통상부 소관
  - 나. 중소기업부 소관
  - 다. 지식재산처 소관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 가. 산업통상부 소관
  - 나. 중소기업부 소관
4.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의안번호 2212670)
5.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보고
  - 가. 산업통상부 소관
    -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
    -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개발(R&D)
    - 지역거점 AX혁신 기술개발(R&D)
    - AX 실증밸리 조성(R&D)
    - AI완전자율운행선박기술개발사업
6. 제2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보고
7. 통상현안 보고
  - 한·미 관세협상 결과 보고
  - 한·말레이시아 FTA 타결 보고
  - 한·에콰도르 SECA 정식서명 보고
  -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 계획 보고

상정된 안건

1.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 3
2.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 4
  - 가. 산업통상부 소관
  - 나. 중소기업부 소관

|  |   |
|--|---|
| 다. 지식재산처 소관  |   |
|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              | 4 |
| 가. 산업통상부 소관  |   |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
| 4.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의안번호 2212670) ..... | 4 |
| 5.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보고 .....                           | 4 |
| 가. 산업통상부 소관  |   |
| -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                                     |   |
| -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   |
| -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개발(R&D)                         |   |
| - 지역거점 AX혁신 기술개발(R&D)                              |   |
| - AX 실증밸리 조성(R&D)                                  |   |
| - AI완전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                                 |   |
| 6. 제2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보고 .....                | 4 |
| 7. 통상현안 보고 .....                                   | 4 |
| - 한·미 관세협상 결과 보고                                   |   |
| - 한·말레이시아 FTA 타결 보고                                |   |
| - 한·에콰도르 SECA 정식서명 보고                              |   |
| -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 계획 보고                            |   |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소관기관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나라는 AI 산업의 성장에 따른 고부가가치 반도체의 수요 증가, 케데현으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한류붐에 힘입어 화장품, 식료품 등 다양한 K-제품의 수출 확대와 수출지역 다변화로 인해 심각한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견고한 증가세를 보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은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고 제조업 경쟁력 및 혁신 역량의 약화로 인해 국가경제 전반에 위기 신호가 울리고 있습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과 상생페이백 등 경기 진작을 위한 각종 서민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 심리는 여전히 위축되어 있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으로써 국내 산업 현장의 불안감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듯 합니다만 한미 정상회담 합의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고 있어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관세협상 결과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기대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내외로 산적해 있는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심의 과정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두 분 장관님과 처장님을 비롯한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사항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24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회의장에 배석해 있고 그 밖의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회의장 밖에 대기하도록 조치하였으니 질의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도 회의에 배석하도록 조치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예결위 참석, 국외 출장 등을 이유로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 지식재산처 목성호 차장 등을 비롯한 일부 산하기관장의 불출석 및 대리출석을 양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 중계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과 17일 양일에 걸쳐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2025년도 의회거버넌스 역량강화 과정의 일환으로 지방의회 연수생 각 1인이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를 방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14시08분)

○위원장 이철규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종전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 업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된 정부조직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지난 10월 26일 본회의에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11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 위원 정수가 30명에서 24명으로 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치열한 토론을 나누며 우리나라 산업계의 발전과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애써 주시고 에너지정책에 많은 의견을 주셨던 김정호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 박형수 위원님, 서왕진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 이렇게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옮겨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4명의 우리 위원회 정원에 맞게 소위원회 정수 조정과 소위 위원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초 13명이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의 명칭을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로 변경하면서 정수를 10명으로 조정하고 김정호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이렇게 세 분이 소위원회에서 사임하셨습니다. 또한 역시 13명이었던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정수를 9명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박지혜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 박형수 위원님, 서왕진 위원님 이렇게 네 분이 소위원회에서 사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13명이었던 예산결산소위원회는 10명으로 위원정수를 조정하고 박지

해 위원님, 이재관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서왕진 위원님 이렇게 네 분이 사임하시고 김종민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시는 것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원소위원회는 변동 없이 현재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위원회 정수를 조정하고 소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다음 예산안을 심사할 차례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와 대체토론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예산 관련 의사일정과 보고 관련 의사일정을 한꺼번에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2.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산업통상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다. 지식재산처 소관

##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산업통상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4.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의안번호 2212670)

## 5.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보고

가. 산업통상부 소관

-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
-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개발(R&D)
- 지역거점 AX혁신 기술개발(R&D)
- AX 실증밸리 조성(R&D)
- AI완전자율운행선박기술개발사업

## 6. 제2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보고

## 7. 통상현안 보고

- 한·미 관세협상 결과 보고
- 한·말레이시아 FTA 타결 보고
- 한·에콰도르 SECA 정식서명 보고
-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 계획 보고

(14시11분)

○위원장 이철규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식재산처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산업통상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

확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제2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통상현안 보고의 건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통상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APEC 정상회의는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합의를 통한 수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우리 기업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등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본, 중국 그리고 아세안 주요 국가의 교류 협력 관계도 더욱 확대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의 핵심광물 통제 등 대외 리스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전반적인 생산성 하락, 지역 간·기업 간 불균형 심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러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동시에 미래 먹거리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산업통상부 2026년 예산은 올해 대비 23% 증가한 9조 786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점 투자 방향은 산업 전반의 AX 확산, 첨단 및 주력산업 육성, 통상 및 수출 대응 강화, 공급망 안정화, 5극3특 지역성장 등 5대 분야에 집중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 전반의 AX 확산입니다.

인구감소와 생산성 하락이라는 제조업이 안고 있는 난제를 돌파하기 위해 제조 현장과 제품 혁신에 AI를 본격 활용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을 2026년에 약 1.1조 원 반영해 올해 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재원을 투자하겠습니다. 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소 이상을 보급하여 제조 현장의 생산성을 30% 이상 끌어올리겠습니다.

로봇, 자율차 등 미래 먹거리를 선도하기 위해 퍼지컬 AI에 402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AI 제품 개발에 1575억 원을 투입해 2년 내 60여 종을 시장에 출시하고 자동차·가전의 AI 기능 구현에 꼭 필요한 온디바이스 AI반도체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투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1000개 이상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첨단 및 주력산업 육성입니다.

올해보다 26% 늘어난 1.6조 원을 투입해 우리 핵심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도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양산 펌과 동일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가능한 미니팜 구축에 1157억 원을 투자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상용화를 앞당기겠습니다. 조선은 자율운항선박 등 기술개발에 1786억 원을 지원하고 미국 현지에 조선협력센터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통상 및 수출 대응 강화입니다.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조치 이행을 뒷받침하고 수출 경쟁력을 넓이기 위해 1.7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와 조선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6005억 원 출연하겠습니다. 관세조치 영향이 큰 중소·중견 수출기업에는 물류비, 현지 유통망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높아진 한류 위상을 발판 삼아 유통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5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컨설팅, 파트너 발굴, 마케팅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첨단산업, 공급망 등 투자 프로젝트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공급망 안정화입니다.

특정국의 자원 무기화 등 대외 리스크에도 공급망이 견고히 유지되도록 약 2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안보 핵심품목의 국내 생산 촉진과 소부장 기업의 신규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사용 후 배터리 등 재자원화 사업을 신규 편성해 핵심광물의 국내 공급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다섯째, 5극3특 지역성장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아직 발전의 기회가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의 성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5극3특 지역성장 엔진 육성을 위해 예산을 0.9조 원으로 16.8% 확대하였습니다.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투자보조금 한도를 기업당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지역 R&D 지원은 시·도 단위에서 광역으로 개편하고 광역 간 협력형 R&D를 추진하여 지역의 혁신 역량을 한 차원 높이겠습니다.

지역경제의 거점인 산업단지는 4073억 원을 투입해 AX 전환, 기반시설 확충,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고도화시키는 한편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는 전력망 구축 등 RE100 산단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이차보전, 기술개발 등 지원 대상도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는 무역보험법 제8조에 따라 연간 인수 가능한 최대 무역보험 규모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무역보험 제도가 수출기업 수요를 충분히 지원하도록 2026년도 한도는 올해 대비 30조 원 증액한 310조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이 글로벌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오승철 기조실장 나오셔서 예타 면제사업과 제2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기획조정실장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 오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료 1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개요입니다.

정부는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AI 대전환 등에 적기 투자하기 위해 총 6건의 사업을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면제하였습니다.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개발, 지역거점 AX혁신 기술개발, AX 실증밸리 조성 등 5개 사업은 지난 8월 18일 국무회의를 거쳤으며, AI 완전자율운행선박 기술개발은 10월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습니다.

사업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소비패턴 변화와 플랫폼 경제의 승자독식 구조 등으로 인해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모두 해외 신시장 개척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산업부는 K-유통의 글로벌 진출과 중소 제조기업의 소비재 수출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지 컨설팅, 물류 지원, K-소비재 팝업스토어 개설 등을 통해 유통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역직구 활성화도 병행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8년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총 2053억 원입니다.

3쪽,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입니다.

세계적으로 제조·식품·의료 등 전 산업에서 AI를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국내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이에 정부는 1~2년 내에 시장 출시가 가능한 AI 응용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AI 응용제품의 성능·신뢰성 평가 등 실증과 함께 기성 제품의 AI 기능 탑재, 제품 인증 획득, 지적권 확보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7년까지 2년이며 사업비는 총 1조 1571억 원입니다. 이 중 산업부 소관은 2100억 원입니다.

4쪽,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개발입니다.

산업 전반의 AI 확산에 따라 AI반도체 시장도 고비용 클라우드 중심에서 경량화된 형태의 온디바이스 반도체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상 위기와 우리 기업들의 외산 반도체 의존이 심화되고 있어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산업 AI 생태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자동차·가전·로봇·방산 등 4대 업종 수요 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팹리스와 함께 첨단제품에 필요한 AI 반도체 풀스택을 공동 개발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며 사업비는 총 9973억 원입니다.

5쪽, 지역거점 AX 혁신기술 개발입니다.

글로벌 AX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국가 차원의 AX 생태계 구축과 함께 AX 혁신거점을 육성하여 핵심산업 AX를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오·로봇 산업이 밀집된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AI 개발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AX 핵심기술과 제품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며 사업비는 총 5510억 원입니다. 다부처 협업 사업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 중 산업부 소관은 1700억 원으로 로봇 분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6쪽, AX 실증밸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5쪽에서 보고드린 사업과 같이 지역에 AX 혁신거점을 조성하는 또 다른 사업입니다. 광주 지역 특화산업 중 하나인 모빌리티 산업의 AX 가속화를 위해 자율주행 모빌리티 AX 핵심기술과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며 사업비는 총 6000억 원입니다. 역시 다부처 협업 사업이며 총사업비 중 산업부 소관은 600억 원입니다.

7쪽, AI 완전자율운행선박 기술개발입니다.

자율운행선박 상용화에 대비하여 세계 주요국의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며 2030년까지 국제표준도 제정될 전망입니다. 향후 큰 성장이 예상되는 자율운행선박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완전자율운행선박 혁신기술을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부와 해수부는 무인항해 시스템, 기관자동화 시스템, 화물·항만 원격운용 기술, 자율운행선박 검인증 기술 등 완전자율운행선박 핵심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이며 사업비는 총 6034.5억 원입니다. 이 중 산업부 소관은 3315.9억 원입니다.

산업부는 이상 보고드린 사업들을 통해 산업을 혁신하고 신성장동력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세요.

○산업통상부기획조정실장 오승철 이어서 2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본계획은 소재·부품·장비 산업법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으로 2020년 10월 수립한 1차 기본계획에 이어 올해 10월 23일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서는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위기를 우리 소부장 자립화의 기회로 전환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소부장 산업은 일본 수출규제 당시보다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첨단산업과 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과 견제가 치열하게 전개되는 한편 인공지능과 탄소중립 확산으로 산업 대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혁기에 우리 소부장의 경쟁력은 기술·수출·생태계 측면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에 아직 부족합니다. 이에 독보적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수출시장 진출 확대, 새로운 내수시장 창출 등 우리 소부장 산업의 시장규모 확대도 필요합니다. 또한 수요·공급 기업이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하는 생태계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3쪽입니다.

정부는 혁신 역량, 시장 역량, 생태계 역량 등 3대 역량을 강화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제도약과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첫째, 혁신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R&D 전략 방향인 소부장 핵심전략지도를 마련하고 시장 선점형 등 4대 도전기술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AI를 통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신소재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하겠습니다. 혁신 역량을 갖춘 소재·부품·장비 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혁신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타트업부터 글로벌 최고 역량을 보유한 슈퍼 을 기업까지 기업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15대 슈퍼 을 프로젝트당 200억 원 이상의 R&D를 투자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 시장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한미 조선 협력 등 주요 수출국의 산업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수출시장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공공 분야가 선도하여 내수 시장도 키우겠습니다. AI·양자·방산·재생에너지·항공 등 5대 분야 핵심 소재·부품·장비를 공공 수요처와 제조기업이 함께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해 수요·공급 기업 모두가 성장하는 3대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요·공급 기업 협력 모델을 R&D 전반으로 확대하는 한편 반도체 유통기관 등 차세대 전략 품목을 대상으로 생태계 완성형 협력모델도 추진하겠습니다. 수요·공급 기업 간 생산 협력의 장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는 2030년까지 10개를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수요·공급 기업 간 기술·생산 협력이 최종적으로 구매로 이어지도록 소부장 정책보험과 같은 정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추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재정, 첨단산업기금 및 국민성장펀드 등을 활용하여 마중물 투자를 확대하고 핵심광물·원소재의 공급망 안정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추진 과제별 이행 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나오셔서 통상현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미 관세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고 통상협정의 주요 진전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통상조약법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콰도르·아세안과의 통상협정 진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한미 관세협상 진행 상황입니다.

7월 30일 한미 양국은 3500억 불 전략적 투자 지원과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관세를 15%로 인하하는 큰 틀의 관세협상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3500억 불 전략적 투자는 미국이 주도하는 2000억 불 투자와 우리 주도의 1500억 불 조선협력투자로 구성됩니다. 투자 규모는 당초 3500억 불에서 2000억 불로 43% 축소되었고 조선협력투자에는 민간 주도의 해외 직접투자 외에도 대출보증 및 선박금융이 포함됩니다.

다음, 2000억 불 투자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투자를 선정하고 투자위원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을 협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또한 협의위원회는 투자위원회의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투자 분야는 경제·국가안보 분야로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양자컴퓨팅 등입니다. 투자 자금은 연간 200억 불 한도 내에서 사업의 진척정도에 따른 자금 납입요구가 있을 때 납입하며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에는 납입 시기 및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2페이지, 현금흐름 부분입니다.

위험통합관리를 통해서 설령 특정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다른 성공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 보전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투자 수익은 원리금을 상환받기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에 5 대 5로 배분되며 원리금 상환 이후에는 한국과 미국에 1 대 9로 배분됩니다.

다만 프로젝트별 원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양국이 합의하여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프로젝트 벤더 선정 시에 한국 업체를 선정하고 개별 프로젝트별로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 선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선협력투자 관련 내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1500억 불 규모의 조선 분야 사업에 대해 직접 또는 협의위원회를 통해 민간투자·대출보증·선박금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세 인하입니다.

미국은 우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고 상호관세 적용 관련 미국의 최혜국 관세율이 15% 이상이더라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총 15% 관세율만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미국의 최혜국 관세율이 15% 이상일 경우에는 일본·EU의 경우에는 15%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우리는 한미 FTA에 따라 15%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7월 30일 합의 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관세 인하 사항으로 목재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가 최대 50%에서 15%로 인하되고 항공기 및 부품에 대한 상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가 모두 면제됩니다. 제네릭 의약품, 일부 천연자원 등에 대한

상호관세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반도체 관세는 우리 주요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성과 및 평가입니다.

우선 대미 수출 및 우리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투자 선정 시에 상업적 합리성을 반영하고 또한 원금회수 가능성 제고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마스가 프로젝트 등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미 관세협상 진행 상황 보고를 마치고 3건의 통상협정 진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말레이시아 FTA 타결 건입니다.

아세안 국가 중에 제3위 교역국이자 제4위 투자 대상국인 말레이시아와의 FTA 협상은 지난 10월 26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타결되었습니다.

먼저 상품 분야에서 양국은 95% 이상의 관세 철폐를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개방이 제한적이었던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주력 수출품목의 추가 개방으로 우리 기업의 판로가 확대되고 또한 음악·영화·게임 등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로 K-콘텐츠 수출 요건을 개선하였으며 바이오·할랄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한-말레이시아 FTA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내년 중에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서명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서명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중남미 주요 신흥 시장이자 천연자원 부국인 에콰도르와 9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서 올해 9월 정식으로 협정문에 서명하였습니다.

먼저 양국은 주요 교역 품목에 대해 90% 이상의 관세 철폐를 약속하였고 특히 40% 고율 관세가 적용 중인 우리 자동차에 대해서 15년간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여 중국·일본 등 주요 경쟁국보다 유리한 수출 기반을 확보하였고 서비스 시장에서도 게임·영화·음반 등 문화 분야 등을 추가 개방하여 중남미에 K-콘텐츠 확산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한-에콰도르 SECA에 대한 국내산업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발효한 한-아세안 FTA는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강화의 유효유 역할을 하면서 교역·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만 발효 후 1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간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정부는 아세안과의 협상에 본격 돌입하여 기존의 한-아세안 FTA를 새로운 디지털·그린 시대에 걸맞게 업그레이드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규범을 도입해서 선진 디지털 무역·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베트남·인니 등 핵심광물 보유국과의 협력강화 기반을 다지며 탄소시장, 수소 등 녹색산업에 대한 규범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세와 내수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기화된 고금리 기조로 회복 속도는 제약되고 개인 사업자들의 상황 부담은 여전합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무역환경 변화 등 전반적인 경제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민생 회복과 성장에 중점을 두고 2026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인공지능발 산업 대전환기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실기하지 않기 위한 확장·균형 재정 기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관행적·비효율적 사업들을 구조조정해 꼭 필요한 곳에 자원이 배분되도록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세출예산안 및 기금지출안 규모는 올해보다 10.5% 증가한 16조 8449억 원입니다.

내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은 소상공인의 회복과 자생력 강화에 집중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동력인 창업벤처와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글로벌 도약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같은 방향 아래 첫째, 소상공인의 회복을 넘어 성장 촉진, 둘째 창업·벤처 4대 강국 도약, 셋째 AX 대전환을 통한 중소기업 스케일업, 넷째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다섯째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2026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안의 세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의 회복을 넘어 자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주력하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3.4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을 통해서 자금조달 애로를 줄여드리고자 합니다. 폐업비용 부담으로 새로운 시작이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점포 철거비 지원을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하고 폐업 후 재취업·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5.5조 원 규모로 발행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곳곳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지역상권 르네상스 2.0을 본격 추진해서 개별 소상공인이 아닌 상권 생태계를 육성하겠습니다. 동네 단위 골목상권인 소규모부터 지역 대표상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상권까지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K-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소상공인 성장 사다리도 구축합니다. 경쟁력 있는 강한 소상공인을 발굴해서 온라인 판매 지원, DX 혁신을 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고 최종적으로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K-소상공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정부정책을 손쉽게 찾고 경영에 도움받

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AI 도우미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올해는 벤처 30주년이 되는 해로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벤처투자 시장 확대를 위해 모태펀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원으로 확대 공급하고자 합니다.

유망 테크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 기술 고도화, 해외법인 설립 등 종합 지원하는 유니콘 브릿지 사업도 신규 편성했습니다.

미래를 이끌 인공지능·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시장 안착을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셋째, R&D 혁신과 AX 대전환을 통해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겠습니다.

역대 최대의 R&D 예산 2.2조 원을 편성하고 돈이 되는 R&D에 집중 투자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 주도형 성장을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디지털과 인공지능 기반의 제조 혁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뿌리부터 첨단까지 지역 기반 AX 대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K-뷰티 및 전략 품목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체험관과 바이어 상담회,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확충해 가겠습니다.

넷째로는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혁신 선도기업들을 위한 기업 맞춤형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특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R&D 사업을 4.5배로 대폭 증액하고 역량 있는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Jump-up 프로그램 예산을 2배로 확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기술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피해회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 확산을 위해 상생협력기금과 매칭하여 ESG 대응 등을 지원하며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소상공인의 회복 및 성장과 중소·벤처·스타트업의 미래 도약을 위한 정책 지원들이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용선 지식재산처 처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지식재산처의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번 예산안은 지식재산처로서 처음 편성되는 것이니만큼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재산처는 국민들에게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기업의 혁신 노력이 우수한 지식재산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식재산처의 26년도 세입은 올해 대비 2.7% 증가한 7176억 원입니다.

전년도세계잉여금 등이 일부 감소하였으나 주 수입원인 수수료 수입이 약 8.5% 증가하여 전체 규모는 19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세출은 올해 대비 2.7% 증가한 7248억 원입니다.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지식재산행정 정보화,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강화 등을 위한 주요사업비 예산은 14.7% 증가한 418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식 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께서는 취임 이후에 오늘이 첫 전체회의 참석인데 취임 소감 및 앞으로의 포부 등 한 말씀해 주시고 들어가시지요.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초대 지식재산처장으로 보임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혁신과 또 혁신의 유인인 지식재산으로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을 새로 그림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뭐 있습니까?

○**강승규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좀, 질문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 이철규** 질문 아직…… 좀 이따가 하시면 안 되겠나요? 검토보고 받고 난 다음에 하시지요.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통상부 및 지식재산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2026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요약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2025년 9월 정부 예산안 제출시를 기준으로 2026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5개 회계, 4개 기금으로 구성되었는데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관리 운영 주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됨에 따라서 26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등 5개 회계와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무역보험기금 등 2개 기금으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개편된 정부 조직을 기준으로 2026년도 산업통상부 소관의 세출 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13조 6820억 원에서 12.5%가 감액된 1조 7111억 원을 이관하고 남은 11조 9709억 원입니다.

2쪽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6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 정부 제출안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이관하고 남은 6조 5001억 원입니다.

산업부 소관 회계 기금별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관세 피해 업종 2차 보전 지원 사업은 철강, 알루미늄, 구리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년간 소요되는 이자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나 실제 사업 추진 일정과 이에 따른 평균 지원 기간 축소 가능성, 중견기업 위주의 대출 수요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서 동 사업 예산안을 적정 규모로 산정하고 향후 대외 관세 정책 전망 등을 고려해서 사업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4쪽입니다.

한미 조선헌양산업 기술협력센터는 한미 양국 간 조선산업 협력을 위한 미국 내 거점으로서 산업기술협력센터를 구축하고 국내에 기능장급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현지 인력에 게 실무 기술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전문인력의 미국 내 체류 기간 및 비자 유형 등과 관련해서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미국과 사전 협의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사업은 2024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후 최근에서 적정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2025년 올해 예산 집행이 지연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해서 2026년 예산을 조정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글로벌 우수기업 연구소 육성 사업, IPEF 청정경제촉진펀드 조성 사업, CVC 투자 연계 대외 중견·중소기업 협력 R&D 사업 등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에특회계의 재정 운용 방향과 관련해서 정부조직 개편 이후에 산업통상부 소관 에특회계의 세입은 1조 8582억 원임에 비해서 세출 규모는 7410억 원에 불과하고 세출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

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매년 전입금을 받는 등 에특회계와 타 부처 소관 기금 간 재원의 성격이 불분명해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두 재원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서 당초 특별회계 운영 취지에 맞도록 재원을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그 밖에도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원,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 사업과 관련해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제조 산업 생산 공정에 자율 제조 등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제조 AI R&D 사업과 관련해서 기계 장비 산업 기술 개발은 기존 세부 사업의 일부 내역을 조정하거나 예타 면제 사업을 통해 산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제조 AI 관련 R&D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산업통상부 소관 R&D 사업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제조 AI 관련 R&D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하단에 지역 투자 촉진의 내역사업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 신규 투자 지원을 위해서 신증설 투자 보조금 및 지방 이전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산 지연, 사업 시행자의 사업 포기 또는 투자 미이행 등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보다 투자 이행 및 고용 창출 실적이 저조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보조금 지급 건에 대해서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과 관련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융자 사업은 첨단전략산업 분야 확대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되어 중소·중견기업 R&D 자금 지원 공백이 우려되므로 정책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적정 규모의 융자 사업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무역보험기금과 관련해서 기타 경비 327억 원 사업은 매년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지 않고 계획안을 산출하고 있는데 이를 납부하기 위해 2025년에 604억 8300만 원을 증액 변경한 데 이어서 2026년에도 수백억 원의 계획 변경이 예상되므로 11월 현재 활용 가능한 자료를 기반으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해서 계획안에 반영하고 계획 변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쪽 지식재산처 소관입니다.

예산안 개요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관련해서 두 번째 사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운영 등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관련 3개 사업은 국가 발명 인재 간의 체험 콘텐츠를 양질의 콘텐츠로 내실화하고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신사업 발굴을 통해서 발명 교육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2쪽 2026년 무역보험 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무역보험 계약 체결 한도 총액은 25년도 280조 원에서 30조



원 증액된 310조 원으로 이 중 본 한도는 25년도 255조 원에서 30조 원 증액된 285조 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중장기 수출보험 등의 공급 확대에 따른 계약 누적으로 유효 계약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통상 유효 계약액은 70조, 80조 원 수준이었으나 2023년 방산 수출 계약 지원 등에 따라 100조 원 이상 확대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6년에는 138.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중장기 수출보험 인수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 및 기금 건전성 유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소미 전문위원 나오셔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전문위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신규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수출의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사업은 총 4168억 원 규모로 탄소감축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미 2022년 관계부처 합동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방안이 의결된 바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도 주관 부처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사전 절차 준비 기간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공백 영역이었던 중소기업의 탄소규제 수출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긴요한 사업인 만큼 재정 사업의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사업은 총사업비 규모가 1688억 원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함에도 기존 세부사업 내에 내역사업으로 신설됐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동 사업은 AX-Sprint 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형 과제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정부에서 예산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에 각 소관 부처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기술혁신 계정에 출연하는 R&D 사업화 계정 출연 사업은 IP·R&D 유동화보증 등 중소기업의 R&D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동 계정을 통해서 보증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업승계 M&A 지원 사업은 M&A 방식의 제삼자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술

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출연금에 대한 법률 근거를 요구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인 기본재산에 편입되기 때문에 출연금을 M&A 지원업무에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출연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별도 계정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참여기업 간의 담합으로 인해 부정행위 방지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을 선택한 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최근 3년간 세금계산서 취소 및 역발행 등 총 220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따라서 참여제한 처분과 재참여 기준을 정비하는 등 부정행위 관리 강화에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적발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부정행위 대응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중복 방지와 차별화가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은 제조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부 모두 지원 대상에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하고 있고 사업 내용도 유사한 사항이 있으므로 양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과제 기획단계에서부터 대상과 범위를 검토하고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출연 사업은 AI 등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우대보증 지원을 위해서 편성되었지만 2022년 이후에 일반보증 계정의 순자산 증가율에 비해서 보증잔액 증가율이 낮게 나타나는 등 보수적인 운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보증 공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장애인기업 육성 사업은 1인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사업예산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원 규모를 고용노동부의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참고해서 총 대상기업의 1%에 해당하는 115개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보다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 수혜자에 대한 면밀한 수요 파악을 토대로 사업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입니다.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은 올해 제2회 추경으로 5706억 원 규모의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 조성을 추진하였지만 현재까지 결성된 펀드가 전무하고 결성시한 12월까지 모든 펀드가 결성되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단계별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추경편성 목적으로 제시한 AI·딥테크 기업에 대한 연내 자금 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투자 가능성이 불투명한 펀드 출자를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재정운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를 보유해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중소기업에 대해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사업의 기본적 성격이 담보, 신용도가 부족해서 민간금융시장을 이용하기는 어렵지만 기술이 뛰어난 우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여건에서 재정지출 효과를 위해 직접융자로의 자금지원 방식 전환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의 법적근거가 2024년 1월에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반영을 적극 검토하여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피해 소상공인이 조속히 회복·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위원님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강승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철규 강승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강승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겸 자료가 혹시 준비되면 제 질의 때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관세협상이 타결된 지 보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MOU나 팩트시트가 2~3일 내, 3~4일 내, 일주일 내에 된다고 하던 것이 아직도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 이유를 좀 명확히 밝혀 주시고, 국방부장관이 어느 언론에서 ‘핵잠 등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관세협상이나 이런 안보 분야가 아닌 경제 분야 등에서는 전혀 이견이 없는 건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여기의 기본구상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축산물 검역 절차, 사과류, 사과 등 과채류의 검역, US데스크 설치 등 그동안 미국 측에서 바라는 내용과 우리가 그저 감추기에 급급한 내용 등에 대해 팩트시트, MOU 등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보고에서 전략적 투자 MOU 기본구성에서 ‘당초 3500억 불에서 2000억 불로 규모가 축소됐다. 43% 축소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3500억 불했을 때 대출·보증·펀드 등으로 구성돼 있고 현금 투자는 5% 정도 될 것이라는 당국자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 말의 배경은 뭐고 이 말은 지금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지금 국내법 등을 적용할 때 현금 투자가 1~2%라고 하는데 우리는 매년 200억 불을 상한선으로 했다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일본보다 더 유리한 건지, 일본 투자 내용과 우리 투자와의 비교를 좀 부탁드립니다.

○김동아 위원 질의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철규 나중에 질의 시간에 질의를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시지요?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양당 간사님 간의 합의에 의해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서 5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가급적 예산소위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시간은 충분하니까 그때 가서 질의를 하시고 가능하다면 이외 소위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위원** 산업부장관님, 이재명 정부 5개월 만에 경주 APEC에서 한미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아직 작업은 좀 남아 있지만.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보다 적은 투자 규모에 합의했으며 대출 보증 활용 안전장치를 마련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 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관세협상은 통상전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동맹 현대화 측면에서 국익을 지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였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매우 빛났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관 장관에 대해서 ‘훌륭한 분, 아주 까다로운 협상가’ 이런 극찬을 했어요. 장관님은 트럼프한테 칭찬을 받았으니까 저는 뒤에 계시는 산업부 관계자님들과 협상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제가 국민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만 국민을 대신해서 산업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APEC의 결정적 장면 중의 하나가, APEC 현장에 기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함께 했어요. 사실 이것은 다른 APEC에서는 못 보던 장면인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특히나 정의선 현대차 회장께서 이재명 대통령께 깊이 고개 숙이면서 감사해하던 장면은 굉장히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함께 도움을 주신 이재용 삼성 회장님이나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님 등 기업인들께도 장관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인사 한번 하시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가 예결위장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의 카운터파트너 러트닉 장관이 한국은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른 게 하나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다른 나라들은 관료들만 오는데 한국은 항상 기업인들이 있으면 와서 자기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더라. 그래서 한국은 기업과 정부가 같이 뛰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기업인들 이번에 크게 고생하셨고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원이 위원** 이번에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의 내용을 정리한 MOU나 혹은 팩트시트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저는 늦어지더라도 국익을 위해서 꼼꼼히 살펴 달라, 시간에 얽매이지 말라, 지금은 속도보다는 국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한미관세협상의 MOU를 국회에 보고하고 비준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두 나라가 국회에 보고하고 비준동의 절차를 밟았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아닙니다.

○**김원이 위원** 그 두 나라가 밟을 계획이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없습니다.

○**김원이 위원** 왜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일단 이 MOU 자체가 비구속적으로 된다는 게 MOU 안에 담겨 있고요. 아카자와 일본 대신하고 같이 만났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앞으로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 전개되는데 비준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귀속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도 고려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원이 위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협상에 임한 상대방인 트럼프 행정부에서 ‘행정명령에 의해 진행되므로 국회 비준동의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미국 측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미국은 답답한 게 하나 있지요. 연방법원에서 이 관세협상에 대해서 지금 법적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국회 비준동의를 미국은 안 받으려고 하겠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렇게 전망되지요? 예상되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원이 위원** 또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는데 계약 상대방인 미국은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가 전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렇지요. 대한민국은 법적 구속력을 받는 상황이 전개되는 반면 미국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양국의 수출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불균형,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이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국회 비준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굳이 국회 비준을 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위원** PPT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대통령의 여러 순방외교부터 산업부 간에 이런 MOU 체결 현황들이 있더라고요. 봤더니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MOU도 여러 건이 있는데 다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다음 페이지 봐 주세요.

국회 동의를 다 받지 않았더라고요. 이런 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대통령 순방외교를 포함해서 정부의 MOU가 총 22건 있었는데 그중에 국회의 동의나 비준을 받은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원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잠시 전에 ‘우리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다. 우리 기업인들이 대거 참여해서 국익을 위해서 뛰고 있어서 인상 깊었다’ 이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정부 부분뿐

만 아니라 민간 부분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인들이 또 기업 활동이 마음껏 펼 수 있게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내에서 목소리를 높여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마치 기업인을 늘 죄인시하고 기업인을 옥죄는 이런 분위기가 타파될 수 있도록, 이런 기업의 기업 활동을 어찌 보면 뒷받침하는 산업부가 목소리를 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위원장 이철규 다음은 존경하는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 정동만 위원입니다.

산자부장관님, 한미관세협상이 끝까지 갭갭이 상황인데 7월 구두합의 이후에 3개월 동안 질질 끌었고 그동안 대미 수출 기업들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팩트시트도 없고 양해각서 체결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관님 팩트시트 언제 나오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마무리 단계 맞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정동만 위원 그때 양해각서도 같이 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정동만 위원 어느 시점에 되지요? 예상하고 있는 날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최근에 여러 고위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날짜를 예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마지막에 왔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헌법 제60조에 보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 동의권을 국회가 가진다’라고 돼 있는데 500조가 넘는 나랏돈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민주당 주장에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보니까 방금 김원이 간사님 대답에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재정에 필요한 법안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금법을 만들어서 국회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MOU 같은 경우는 조약이 아니고 비구속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는 받을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회에 설명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에 국회 비준 받을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국회 비준의 내용에 걸맞게 재정 관련 부분은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 때 국회 동의를 받을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설명은 좀 해 주시고요.

애초 현금 5%만 투자한다 해 놓고 결국 2000억 불 내놓게 되었고 또 자동차만 봐도 저희는 관세가 없었고 일본은 2.5%였지 않습니까? 이제 똑같이 15%가 됐는데 저희가 12.5%가 돼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이게 성공적인 협상입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도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했는데 일단 미국 입장에서 15%를 마지노선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국내 기업들도 일본과 같은 수준이면 경쟁을 할 만하다는 의견들을 주셔서 그렇게 일단 부족하지만 했습니다.

○정동만 위원 이럴 거면 삼사 개월 질질 끌 이유도 없었지 않습니까?

장관님, 이번 협상에서 외환시장 불안정성이 예상되면 200억 달러씩 송금 보내는 것을 깎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뭐니까? 그 판단은 누가 하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외환시장 당국에서 합니다.

○정동만 위원 그 돈 미국이 안 받겠습니까? 한국 상황을 알아서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것은 우리 외환 당국, 한국은행, 기재부에서 외환시장을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특이하게 이번 협상 조약에 200억 달러 약속 미이행 시에 관세를 다시 올린다는 조항이 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2000억 달러요?

○정동만 위원 200억 달러 약속을 만약에 미이행을 하면 관세를 다시 올린다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미국이 진짜 요구하는 사항 맞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가 지금 질문을 잘…… 200억 달러를……

○정동만 위원 매년 200억 달러를 우리가 주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못……

○정동만 위원 이걸 약속을 못 지켰을 때 관세를 더 올린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게 저희나 일본하고 똑같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정동만 위원 그런데 그 조항에…… 미국이 진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 조항을?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 조항 자체를?

○정동만 위원 그 속내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러니까 미국하고……

○정동만 위원 장관님, 지금 미 연방대법원 재판 진행 중인데 미 대법원 최종 판결 시에 그 관세 부과가 불법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저희 관세협상 효력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연방법원에 가 있는 것은 상호관세고요. 조금 전에 200억 달러에서 올리겠다는 것은, 일단 자동차는 품목 관세입니다. 품목 관세는 지금 대법원에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철규 위원장, 박성민 간사와 사회교대)

○정동만 위원 또 한 가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어디에 할지 저희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미국과 저희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아니지요. 투자위원회가 위원장이 미국 상무장관이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렇지만 협의위원회 위원장인 산업부장관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위원들 모두 미국인들이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협의위원회에는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렇지요. 투자위원회는 전부 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미국입니다.

○정동만 위원 미국인들이고 협의위원회만 장관님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정동만 위원 1분만 또 조금 더 줄 수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성민 위원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웃음소리)

○정동만 위원 협의위원회 조항에 장관님 결정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장관님이 협의위원회 위원장이지만 투자위원회에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협의권이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단지 협의권밖에 없고 어느 곳에 투자를 할 건지 결정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런데 이게 그 내용의 협의를 할 때 저희가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기준 하에서 합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국이 이걸 무슨 두부모 자르듯이 ‘이건 내 거야. 이건 네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동만 위원 장관님, 일단 과연 모든 협상의, 전부 다 무슨 협상을 했고 저희 정부가 얻은 것이 뭔지 다 펼쳐 놓고 투명하게 공개를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최종 결과 나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규 위원 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상 전문가이고 국제법도 잘 아시니까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한미 통상협약에 대해서 헌법 60조에 따른 우호통상항해조약 또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되는지가 이슈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당돼야지만 국회 비준 대상이 되는데요.

본부장님, 국가 간에 약속을 하면 전부 다 조약입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한규 위원** 국제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조약이 되려면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국내법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조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국제기준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라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국제합의여야 조약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의 한미 통상협약도 결국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지의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한미 FTA 기준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 나라가 위반을 하게 되면 패널을 구성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지요? 이게 분쟁 해결 방식 아닙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WTO 같은 경우는 위반하게 되면 디스퓨트 세틀먼트 보디(Dispute Settlement Body)를 만들어서 해결하게 돼 있지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김한규 위원** 이런 것들이 국제법에 따른 해결 절차지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미 통상협약을 만약에 어떤 나라가 위반하게 되면 기존 한미 FTA에 따라서 패널 설치할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아닙니다.

○**김한규 위원** 그렇지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김한규 위원** 그러면 다른 WTO라든지 국제분쟁해결기구에 가도록 돼 있습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아닙니다.

○**김한규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간에 이번에 약속을 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국제합의가 아닌 겁니다. 맞지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맞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제법상 조약이 아니지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우리 헌법 60조에 따라서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 조약에 해당 됩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아닙니다.

○**김한규 위원** 예, 안 됩니다.

혹시 이번에 한미 간에 통상협약 하시면서 기존의 한미 FTA를 개정하시기로 하셨습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렇지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김한규 위원** 만약에 한미 FTA를 개정하게 되면 이건 조약에 대한 비준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양국 간에 협상을 할 때 전제했던 게 이번에는 우

리가 조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니까 각국의 의회의 비준 없이 행정부 간에 협의하기로 하자 이런 전제가 있었던 게 맞습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맞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EU 영국 베트남 일본 같은 나라 미국과 관세 협의를 거쳤는데 현재까지 의회 비준 절차를 거친 나라 있습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만약에 우리가 국회에서 비준 절차를 거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까, 통상?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몇 개월, 수개월은 걸린다고……

○김한규 위원 과거 선례를 보면 한 3개월 전후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회 비준을 거쳐야 되면 우리 자동차관세 25%에서 15%로 인하하는 효과 발생이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예.

○김한규 위원 맞지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김한규 위원 그리고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나라에서는 조약이라고 체결을 하지 않는데, 내부적으로 절차를 거치지 않는데 우리만 만약에 조약이라고 봐서 국내 절차를 거치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국제법적으로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통상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한국이 이런 비조약으로 비준 절차를 거쳤다고 우습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쪽에서는 조약으로 취급 안 해서 당사자들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분쟁해결기구에 안 가도 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잘못하면 너네는 비준하지 않았느냐, 조약이라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분쟁해결기구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김한규 위원 우리가 불필요하게 의무를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저는 이게 만약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면 당연히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닌 걸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산업통상부에서는 이게 조약이면 조약대로, 조약이 아니면 아닌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특히 국제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은 국회에 대해서 관련 내용에 따라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언주 위원 이번에 관세협상 관련해서, 국회 비준 관련해서 얘기가 되고 있어서 계

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한구 본부장님, 이게 국회에서 비준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입법부입니다. 그렇지요? 법률을 제정하는 곳이고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순간 국민의 의사가 표시되는 곳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왜 비준하느냐, 왜 비준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미국하고 이번에 관세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관세, 그러니까 몇 퍼센트로 낮춘다, 올린다는 것은 우리가 비준하는 대상의 영역이라기 보다는 미국의 영역 아닙니까, 그것은?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이언주 위원 그것 마이크 좀 바로……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예.

○이언주 위원 그래서 그거는 지금 미국에서는 뭘로 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미국에서는 지금 행정부 내에서……

○이언주 위원 행정명령으로, 그렇지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의회를 거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행정부에서 결정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이언주 위원 그래서 관세와 관련된 지금 법원의 결정이나, 미국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심사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의 주장은 그것은 행정명령으로 얼마든지 피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품목 관세는 피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뭘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하여튼, 우리의 의무는 뭘니까? 우리는 미국한테 투자하는 게 우리의 의무지요? 지금 현재 협상한 것 중에서도.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이언주 위원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관세 부분보다 우리의 관심사는 투자하기로 한 이 의무 부분을 사실 낮출 수 있으면 낮추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이언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의무를 국회가 비준해 가지고 못 박아 두면 이게 우리한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좀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설사 비준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야 됩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신축성을 가지고 행정부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언주 위원 아까 장관님께서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우리가 설사 해야 된다고 해도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면 관

세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행정부에서 결정하는 거고 지금 협상한 것 중에서 투자 문제는 우리의 부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치적 정국, 미국의 정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이언주 위원 미국 내의 여러 가지 중간선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투자하는 것 금액의 부담이 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지금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이걸 우리가 부담을 완전히 못 박아, 국회에서 비준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법률과 똑같아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이언주 위원 그러면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될 수 있으면 입법을, 비준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도 안 하도록 지금 머리를 써야 되는 건데 안 해도 되는 사안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니까, 이거는? 바보짓입니다. 이런 주장 누가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열릴 걸로 생각되는데,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이언주 위원 이게 지금 장관님도 들어가시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이언주 위원 아마 여러 가지 국가전략산업 지정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자율주행 모빌리티 그다음에 SMR, 저는 이런 것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SMR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저희 부 소관이 아니고 에너지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게 부처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심사하게 돼 있어서 관련 부처에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여간 저희 첨단 이제 11월 말, 12월 초에 만일 하게 되면……

○이언주 위원 좀 이상한데요. 왜냐하면 국가의 어떤 첨단전략산업을 어떻게 키울 건가 하는 문제인데 아무리 에너지 분야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제가 비슷한 취지로 얘기했지만 문화 분야라 하더라도 한국의 산업 분야 어떤 걸 키울 거냐 또 방위산업 이것 어떻게 키울 거냐 이거는 산업부에서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장관께서 그거는 건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느냐, 핵잠 같은 경우에도 SMR 기술이 상당 부분 공유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요. 또 웨스팅하우스하고 우리가 원전산업 관련해서 얼마나 서러움 받고 있습니까? 원천기술이 애초에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이잖아요. 지금 이게 정말 호기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우리한테 기회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산업이라는 게 성장을 하고 있을 때, 아시겠지만 경제성장의 곡선이 있지 않습니까? 성장하는 그 사이클에서 성장 초기에 그 사이클에 올라타지 못하면 시기를 놓칩니다. 맞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언주 위원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 모빌리티라든가 SMR 이런 게 지금 성장기의 초기 단계에 있다, 이 사이클을 놓치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선두그룹에 속하지 못하면 끝이 나는데…… 저는 나중에 원전의 안전성 문제도 SMR로 갔을 때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는 손 빨고 있어야 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고 이게 에너지의 판도를 바꾸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발하고 나서, 선두그룹에 들어가고 나서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투자할 건가 말 건가 그때 가서 결정하더라도 지금 선두그룹에서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모빌리티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모빌리티는 저희 부가 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이 문제는 한 단일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원 위원 김성원입니다.

우선 박정성 차관보 와 있어요, 지금?

잠깐 저기로……

관세 인하 시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제안한 8월 7일 대신’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관세 인하 시기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산업통상부통상차관보 박정성 관세 인하 시기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장관한테 뭐라고 보고했냐고요.

○산업통상부통상차관보 박정성 보고드린 내용은 협상하고 관련된 내용이라……

○김성원 위원 우리가 8월 7일로 하자 제안한 것은 맞습니까, 그러면? 장관한테 그렇게 보고한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부통상차관보 박정성 예, 제가……

○김성원 위원 맞아요?

○산업통상부통상차관보 박정성 문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하거나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원 위원 왜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통상차관보 박정성 협상을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김성원 위원 합의문……

알았어요.

장관님, 관세 인하 효력 발생 시점 8월 7일로 우리가 제안한 게 맞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협상 시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면 협상이 타결됐다면서요? 김용범 실장이 APEC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성원 위원 그러면 관세 인하 효력 발생 시점도 정하지 않고 타결이 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잖아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런 타결 처리 관련해서 지금……

○김성원 위원 우리가 8월 7일로 제안한 것은 맞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성원 위원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용들이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김성원 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내용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더 과한 걸 요청할 때도 있고 서로서로 협상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관세 인하 효력 발생 시점 한 달 차이로 우리가 한 어느 정도 손해를 봅니다, 금액으로? 그냥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자동차 품목 관세로 예를 들어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어느 정도 손실을 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한 1조에서 2조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아니, 시기가 아니라 한 달에. 한 3000억 정도 손해 보지 않습니까, 한 달 늦어질 때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성원 위원 11월 달에 소급 적용 가능합니까, 그러면?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일단 우리 법을 제출하면 그 달의 1일 자로 소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1월 1일 자, 내년 1월 1일 자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내년 1월 1일 자가 아니라 그 달의 1일 자로.

○김성원 위원 그 달의 1일 자로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성원 위원 그러면 올해 11월 통과되느냐 12월 통과되느냐. 좋아요, 만약에 국회 비준 없다고 쳐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가 법안을 11월에 제출을 하면……

○김성원 위원 언제 제출할 거예요, 특별법?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가 MOU가 나오고 다 이렇게 공개가 되고 나면 기재부……

○김성원 위원 아니, 합의문 자체가 있어야 특별법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공개되고 나면 저희가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11월 달에 제출 못 하면 3000억도 날리는 거네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11일인 것 아시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성원 위원 그리고 13일하고 27일, 본회의 딱 두 번밖에 없어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아니, 통과가 아니라 제출을 하면 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을 하면.

○김성원 위원 그런데 자꾸 저거 하지 마시고.

봐 봐요, 합의됐다고 쳐요, 김용범 실장 말대로. 그런데 합의문에 가장 중요한 게 발효 시점 아니에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 발효 시점이 지금 현재 안에서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9월 4일 날 돼서 9월 16일 날 발효가 됐습니다. 일본도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김성원 위원 아니, 일본 얘기하지 말고 우리나라 얘기하는데 자꾸 일본 얘기를 하고 그래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 같은 경우는……

○김성원 위원 아니, 효력 발생 시점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자동차 관세는 관련된 법안을 제출하면……

○김성원 위원 자동차 품목 관세 입장에서 봤을 때 관세 인하의 효력 발생 시점이 중요한 거잖아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런데 효력 발생 시점을 정확하게 합의하지도 않고 합의가 됐다고 타결이 됐다 이렇게 김용범 실장이 얘기할 수 있는 그게 맞냐고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습시다라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김성원 위원 아니, 저기……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 달의 1일로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김성원 위원 아니, 그것은 과정 중에 있는 거고……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아니, 그것은……

○김성원 위원 그러면 이 효력 발생 시점은 미국하고 합의를 해야지 되는 건 맞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자동차는 합의가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성원 위원 아니아니, 관세협상에 있어 가지고.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관세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발효 시기는 법안을 제출하면 그 달의 1일 자로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 그렇게 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안한 8월 7일 대신에’ 그 얘기의 뜻은 뭘니까, 차관보가 보낸 것?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8월 7일에 관련된 내용은 다른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김성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관세 인하의 효력 발생 시점은 지금 발표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는 되어 있다. 그런데 8월은 안 될 것 같고 11월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자동차는 확정이 됐습니다. 자동차는 법안을 제출하면……

○**김성원 위원** 아니, 법안을 제출해야지 1일로 제출하는 거고.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러니까 법안을 제출하면……

○**김성원 위원** 법안을 12월 달에 제출하게 되면 12월 1일로 되는 거고.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12월에 제출하면 12월 1일로 가는 거지요. 법안을 제출한 그 달의 1일 자로 소급해서 가는 걸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원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농산물 관련해 가지고 추가 수입은 없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성원 위원** 검역 절차는 완화가 됩니까, 지금의 절차보다도?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아닙니다.

○**김성원 위원** 아니에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세종시 김종민입니다.

먼저 중기부장관님께 간단하게 당부 하나 드리고요, 산자부장관께 질문드릴게요.

지금 보통 금융시장의 특징 중의 하나가 풍선효과예요. 뭘 하려고 에너지가 쏙 모이면 다른 데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해서 뭔가 전체적인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성장펀드 150조 투자를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중의 투자 여력들이 일로 다 몰려요. 은행들이 다 100조씩, 10조씩 투자 계획을 발표합니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그런데 이렇게 돼서 은행이 투자 주체가 되거나 투자를 되게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모태펀드에서 매칭을 해야 되는데 LP들, 기관투자자들 모집하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또 VC 쪽, 대체투자 쪽은 또 오히려 자금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이런 징후가 지금 현장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 중기부장관님이 챙겨 보셔



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흐름을 챙겨서 이 문제에 대해서 꼭 금융위하고 기재부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안 나타나도록, 부작용이 안 나타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금융위랑 기재부랑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도, 협의할 예정이고요.

○김종민 위원 그리고 위험가중자산 RWA 그 수치를 빨리 조정하는 게 되게 급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챙겨 봐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산자부장관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 의견 얘기할 테니까 장관님이 끝에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협상을 빨리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도장 빨리 찍지 않는 게 좋다고 봐요. 지금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지는. 자세한 얘기는 또 못 하실 얘기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제가 꼬치꼬치 묻지는 않겠는데 가능한 한 여유 있게 천천히 가는 게 좋다. 지금 미국 상황도 만만치가 않아요. 대법원 판결 나 있지요. 또 뉴욕시장이 트럼프하고 별로 사이 안 좋은 사람이 됐잖아요. 이런 게 미국의 불확실성을 상당히 증대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최종 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자꾸 무슨 팩트시트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이것 빨리 하지 마시고 미국이 자꾸 물어보면요 성실하게 시간 가지고 여유 있게 답변해 가면서 우리도 애깃거리를 만들어서 충분하게 신중하게 협상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본질적으로는 이 협상이 되게 저는 부담스러운 협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여건이 되는 대로 최대한 조건을 더 개선시킬 여지가 저는 많이 있다고 봐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0억 달러를 매년 우리가 투자를 한다 이렇게 협상이 돼 있어요. 200억 달러 투자하는데 지금 한국은행이 외환 관련된 기금 수익 가지고 150달러, 150달러가 아니고 150억 달러지요. 그다음에 안 되면 정부 보증채로 50억 달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외환 관리에서 나오는 여유분이 1년에, 작년에 90억 달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돈이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통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 외환을 방어하는 거고 이 돈의 존재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라든가 금리라든가 거시경제의 신뢰도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억 달러씩 막 빠져나가요. 거기다가 기업은 또 6000억 달러가 약속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이렇게 외환이 많이 빠져나가는 게 한 10년 동안 벌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환율이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율이 어려워지면 금리를 올려야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최대한 유리한 여건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비준 얘기를 하잖아요. 예정처는 비준을 받아야 된다는 주장이고 또 조약이라는 문구를 강조하면 비준을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헌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강조하면 비준 대상

이 되는 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약이라고 하는 형식을 강조하면 비준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본다면 비준 안 받아도 됩니다.

문제는 이 정도의, 거의 건국 이래 최대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사안이에요. 이 헌법의 취지는 뭐냐 하면 비준이라고 하는 법적 형태를 갖추어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말은 국민적 합의를 반드시 받아야 이 얘기예요. 이 헌법의 취지는 반드시 반영돼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종민 위원 형식적으로 비준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는 야당이 ‘우리는 반대했다, 니네 왜 했느냐’라고 2년, 3년 후에 다시 발목 잡거나 공격하는 이게 안 되게 만들어야 돼요. 누군가가 ‘그때 우리는 반대했는데 니들이 알아서 했지’ 이런 말이 안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합의하고 조율하고 하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러트닉 장관하고만 계속 열심히 소통하시는 것 같아요. 국회하고도 이 점에 대해서 긴밀하게, 공개적으로 발언하기 어려운 것 같으면 비공개적으로라도 반대 의견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대화하고 해서 야당 위원들도 ‘이것은 우리도 같이 합의해 줬다’ 이런 합의가 꼭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200억 달러씩 매년 못 내요, 이것. 나중에 이것 때문에 환율 어려워지고 또 금리 영향받고 또 기본적으로 국제신인도가 흔들리고 하면 그때 다 들고일어나서 엄청나게 큰 재앙의 씨앗이 됩니다.

제 말씀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대처를…… 형식적으로 비준이냐 아니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 장관님이 정부, 부총리랑 잘 상의하셔서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처 방식에 대한 새로운 개선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원 위원 오랜만에 옳은 말 했네.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박성민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은 여당 위원이신가, 어떻게 되는가……

○김종민 위원 독립 위원입니다, 독립 위원.

○위원장대리 박성민 그러니까 계속 ‘야당 위원, 야당 위원’ 하니까 김종민 위원님은 여당 위원이신가……

○김종민 위원 아니, 일부 야당 위원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위원장대리 박성민 다음은 우리 오세희 여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오세희 위원 중기부장관님, 저는 청년몰 사업 예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청년몰 사업이 행정시설 중심의 사업 설계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화면을 보면 우리가 공모 선정 시도 평가지표가 전통시장 현장과 맞지 않고 그리고 또 지원 구조가 청년 창업자 중심이 아니라 행정 중심이고 셋째는 정부 지원이 끝나면 마케팅 판로 지원 이런 것들이 후속 조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청년몰이 성공하지 못하고 또 예산도 많이 깎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그렇게까지 청년들의…… 행정에 대해서 잘못된 거를 평가해서 보완해서 그런 것들을 육성해야 되는데 정부가 행정 편의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그게 안 됐다고 그래서 그걸 예산을 절반 이상으로 깎았던 말이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말하고요.

내년 예산이 10곳에 2억씩 20억 편성이 됐네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그렇습니다.

○오세희 위원 장관님,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보완을 하실 생각이 있는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번에 지적도 하셔서 청년몰 단위가 아니고 개별 청년상인 관련된 부분에 육성하는 예산을 별도로 마련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상인 육성 관련된 부분에 좀 더 예산 배정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면 저는 사람 중심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 말씀에 동의합니다.

○오세희 위원 공간에서 사람 중심으로 사업이 전환해야 되는 거고 청년몰 사업이 이제 그런 개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 체계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리고 전통시장 고령화라든지 빈 점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청년 창업 수요 확대를 해서 요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구요.

지금 화면을 보면 청년상인 창업, 도약, 성장 3단계로 생애 주기별 지원 체계를 해 봤습니다.

첫째 단계에서는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 초기에 창업 지원금 1 대 1 맞춤형 지원이 있어야 되겠고 1 대 1로 맞춤형 컨설팅, 빈 점포 매칭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 두 번째는 도약 단계에서는 상품 기획과 브랜딩에 대해서 지원하고 O2O라든지 그런 라이브 커머스 입점, 전통시장 공동 마케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아마 장관님은 누구보다도 아실 거라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성장 단계에서 브랜딩 확장 지원이 필요한데 스케일업 자금 연계, 청년상인 선도모델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장관님, 생애 주기별 지원 체계를 정부 사업에 반영할 계획은 분명히 아까 있으시다고 그랬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오세희 위원 있고, 단기 시설이 아니라 장기로 봐서 사업이 종료됐다고 그래서 딱 끊기는 사업 때문에 연속성이 없거든요. 지속성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안의 20억은 기존 청년들의 활성화 지원으로 마무리하고 본 위원회 제안하는 청년상인의 생애 주기별 지원의 예산을 신규로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청년몰 사업을 청년상인 직접 지원 사업으로 두 번째는 창업, 도약, 성장 3단계 생애 주기별로 체계를 맞춰야 된다는 것 그리고 청년상인들의 교육이라든지 브랜딩 지원 예산을 끊이지 않게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상인 관련된 부분에 별도 트랙을 만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의 성장 방식도 그 공식 그대로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나 강한 소상공인 모두 브랜딩이 필요하고 브랜딩이 잘되면 마지막에 해외 수출까지 가는 그래서 기업가형 소상공인이라는 프로그램 속에 있는데요. 청년에 대한 프로그램도 이 부분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필요가 있어서 위원님 계속 관심 가져 주시면 만들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전통시장을 저도 많이 가 보면 전통시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원 체계가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쇼핑 문화의, 쾌적한 쇼핑 문화로 될 수 있는 대로 지원이 가야 되는데 그냥 지원에 급급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전통시장의 지원 체계를 설계할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합리적이고 시대에 맞게 현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지난번에 총리께서도 사실 문화부랑 중기부가 같이 협업해 가지고 한 단계 더 나아간 시장의 모습을 만들어 보자는 말씀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인 모델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욱 위원 광주 동남갑 정진욱입니다.

관세 협상 관련해서 간략히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자리가 민주당 위원들이 모두 모여 있는 자리에서 맞은편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영입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관세 협상 MOU에 국회 비준을 하자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찌면 아직도 달라지지 않으실까 아쉽습니다. 김정관 장관님 협상 잘하셨지 않습니까. 세계적 언론들이 칭찬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월스트리트 할 것 없이 칭찬하고 인정했습니다. 비준 문제는 오직 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 국가의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비준하면 안 됩니다. 협상도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장관님, 자율주행차와 일반 자동차의 가장 큰 차이는 자율주행차에는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같은 인지 센서가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제 인증 기준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9개국 20여 개 기업이 참여해서 2027년 제정을 목표로 국제 표준 논의를 진행 중인데요. 산업부에서 인지부품에 대한 KS인증 표준을 제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이 제정되더라도 이걸 실제로 인증할 시험평가 인증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으면 제도가 작동할 수 없거든요. 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장비가 동시에 저는 가동돼야 된다고 봅니다.

광주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인데요.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라

서 미래차 소부장 특화 단지로 지정돼 있고 자율주행 인지부품 관련 첨단 시험 인증 장비 256종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지부품 국제 표준화에 직접 참여 중인 전국 유일의 전문기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광주에 위치해 있어서 이런 국제 인증에 대해서 어떤 지역보다도 적극적입니다. 이런 전문 인력, 장비 인프라를 갖춘 광주야말로 국내 최초 기능안전시험센터 구축의 최적지라고 저는 보는데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미래 모빌리티 인지부품 표준기반 신뢰성 인증센터 구축 사업이 반드시 반영돼야 합니다. 이것도 국제 표준은 시간이 지나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 사업의 시급성 또 광주의 적격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두 가지 부분에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KS를 한다고는 했지만 인증이 굉장히 필요하고 해서 관련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광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선도적이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이번 예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중기부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정진욱 위원 현재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3개사가 배달앱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독점 시장이라고 사실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중개 수수료 광고비가 일방적으로 인상되면서 자영업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 저도 이 배달앱 TF에서 함께하면서 그걸 어떻게든 낮춰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여러 방안이 강구되고 있지만 가장 실질적 대안 중의 하나가 바로 수수료가 낮고 또 광고비 부담이 없는 공공 배달앱이거든요.

정부가 작년에 공공 배달앱 관련해서 650억 원 규모의 소비 쿠폰 예산을 투입했는데 주문 건수가 전년 대비 3배, 결제액은 2.4배, 월간 활성 이용자가 372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공공 배달앱 선도 도시인 광주의 경우 예산을 2배로 늘리니까 주문 건수도 딱 2배가 됐습니다. 예산 투입이 곧 성과로 이어지는 대표적 사례인데요.

그런데 올해 공공 배달앱 관련해서는 농식품부에서 외식업 경쟁력 관련된 패키지 예산으로 한 14억이 반영된 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소상공인 관련해서 배달앱에 2037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건 공공 배달앱만이 아니고 전체 배달앱에 대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 배달앱을 살리면 지역경제도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는 근본적 대책인데 공공 배달앱 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편성해서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저희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배달앱에 관련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방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민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욱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성민 예, 안 됩니다. 다른 분들 다 똑같이……

○정진욱 위원 그러면 안 물어보고 할 건데.

○위원장대리 박성민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정진욱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박성민 좀 이따 회의 마치고 저하고 이야기하십시오.

○정진욱 위원 위원장님, 존경합니다.

○서일준 위원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을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관세 협상에 우리가 미국에 준 게 뭐니까? 2000억 불하고 마스가입니다. 그런데 마스가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조선 산업은 이제 한물 갔다 그래서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특허 매각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EU에서 동의를 하지 않는 바람에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걸 한화오션에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이번 마스가의 단초가 된 게 한화오션의 필리조 선소 인수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일정 부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서일준 위원 국가가 조선산업에 대해서 전혀 해 준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어려울 때 조선산업이 최대한 역할을 했더라는 걸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번 APEC 때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이 제한이 되니까 우리 핵 잠수함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시гина 장소나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왜냐하면 요 지금 중국 쪽 잠수함을 추적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시는 바람에 중국 쪽에서 굉장히 외교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또 우리 디젤 잠수함을 캐나다, 폴란드, 사우디에 방산 수출을 해야 되는데 캐나다 총리가 와 가지고 한화오션에 실제 현장 방문하기 직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젤 잠수함은 아무 것도 아니다. 소음도 크고 하루에도 두세 번 물 위에 올라와야 되고 잠항 능력도 떨어진 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방산 수출 이야기하는데 장영실함 10월 22일 날 진수식했는데 장관님, 차관님, 산업부 공직자들 아무도 참석 안 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엄청 많은 분들이 왔어요. 실무 계약팀들이, 실무자들이 엄청나게 왔는데 혹시 캐나다 총리가 현장에 갔을 때 장관님 가셨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는 다른 협상이 있어 가지고……

○서일준 위원 캐나다 총리는 장영실함을 한번 보고 ‘베리 석세스풀’했다는 언론 보도를 받았습시다. 아무튼 후속 협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산 자료를 보니까 한미 조선해양산업 기술협력센터에 66억 4400만 원 예산이 태워져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미국에 있는 현지 인력에게 실무 기술을 교육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 어디에도 우리나라 조선 기술 인력을 양성한다는 거는 없어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조선소가 왜 몰락을 했습니까? 장관님, 왜 몰락했는지 아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런데 저희……

○서일준 위원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결국 우리나라에 왔다가 우리도 조선 인력이 부족하니까 또 외국인들 채용하고 지역 상생화 안 되고 하니까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하느냐. 유럽이나 미국이 밝은 전철을 그대로 밟지 않느냐 하는 게 많은 전문가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년도 예산서 어디에도 R&D 예산은 조금 있지만 인력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최고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아마 양이 많아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 주셔서 가지고 지금 저희 안은 조선해양미래혁신인재양성센터라 해 가지고 한 20% 이상 증가해서……

○**서일준 위원** 전체 금액은 조금 증가가 됐는데 결국은 우리 내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야만이 조선산업이 지속 가능하고 그다음에 지역상생이 가능한 겁니다. 지역에서는, 울산이나 거제나 창원이나 부산이나 조선 벨트에 보면 전부 외국인입니다. 지역경제하고 전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라도 인력을 어떻게,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지 다양한 방안으로 해서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러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봉 위원** 산업부장관님·통상교섭본부장님, 이 어려운 관세협상 정말 잘 이렇게 해결하는 데까지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이런저런 지적이 있었습시다라는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제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각에서는 특히 야당 위원들은 빨리 속도 내지 않는다고 많이 얘기했지만 결국은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던 것이 저는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협상 결과와 우리 결과를 보면 확실히 우리가 좀 유리하게 협상 결과가 타결된 것 맞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외국과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시다라는 저희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송재봉 위원** 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협상 결과는 참 잘 맺어졌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사실 이건 우리가 원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의 일방적 요구 때문에 이루어진 협상이기 때문에 잘 방어해 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가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재봉 위원** 미국의 내부적인 여러 가지 절차 사정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송재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정부에게 촉구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발효 시점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빨리 발효가 되는 것이 중요하 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되려면 MOU 이행을 위해서 대미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준비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건

가요, 법안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준비 잘 되고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러면 팩트시트가 발표되는 즉시 법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렇게 해서 단 하루라도 또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장관님도 관심이 많으시지요. 지난번에 저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가 전국에 12개가 있는데 수도권에 2개, 지방에 10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에 있는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이 좀 확대돼야 되고 특히 R&D 투자가 증가돼야 된다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전에 한 2025년에 비수도권이 23%였는데 2026년에 33% 정도로 10% 늘었으니까 조금 의지를 보인 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방에 10개의 첨단전략산업단지가 있는데 예산을 보면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도 각별하게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래서 연도별로 어떻게 증가시켜서 어디까지 갈 것인지 계획을 좀 구체화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송재봉 위원 그리고 정부 투자도 중요하지만 민간 투자가 사실 이런 지역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촉진하기 위한, 거기에 대한 계획도 같이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게 지역경제, 우리 5극3특하고 다 같이 맞물려 있는 이슈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예,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셔서 저에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부장관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요즘에 K-뷰티, K-패션 관련해서 정말 수출도 잘되고 국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서 이 분야의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송재봉 위원 특히 해외 수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수석보좌관회의 때 한류 열풍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급증하는데도 역직구 시장은 여러 장애로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 그래서 역직구 시장을 넓히면 우리가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분야를 강조했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래서 중기부에서도 보니까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안을 준비하



고 계신 것 같은데 곧 발표가 된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송재봉 위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면 좋겠고요, 제가 끝나고.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되려면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예산과 투자가 좀 더 증가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분야와 관련해서 보니까 올해와 내년 예산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전자상거래 분야의 수출 진흥을 위해서는 예산으로 표시를 해 줘야 의지가 반영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산 확대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계신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수출 같은 경우는 수출을 처음 해 보는 초보 기업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고요.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부분들이 뷰티, 패션 그리고 리빙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소프트 파워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재 제품들이 확실하게 물류 통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의 지역도 일본, 중국,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나라들을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 팔리는 뷰티의 전체 나라가 200여 개국이 넘게 지금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테스트를 해 보고 어느 나라에 더 잘 팔리는지 또 어떤 상품이 잘 팔리는지,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데이터 구축도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철민 위원 장철민입니다.

저도 예산 얘기는 소위에서 하고요 협상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장관님을 비롯해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준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게 조약이고,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비준 필요성이 없다는 부분에는 동의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상절차상의 국회 통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동의 가능성을 그냥 이렇게 회피하고 갈 거냐는 저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저희가 이게 조약이 아니더라도 하는 순간 사실은 통상절차법을 굉장히 많이 벗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 보고하거나 국회가 의견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절차밖에 없고 사실상 국회나 국민들이 이런 일방적인, 정말로 사실 협상 고생하시고 잘하시기는 했지만 미국의 일방적인 압력에 의한 협상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국민적인, 주권적인 방어 수단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사실 저는 동의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단순 비준동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준동의를 대체하거나 다르게 볼 수 있는 어떠한 절차법 개정이라든지 제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국회가 중심이 돼서 저희가 방안을 만들어야 되기는 하겠지만요.

당장 저희가 원래 있는 통상절차법의 비준동의를 할 때도 몇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통상조약이 가지고 있는 영향평가 결과라든지 아니면 국내 산업 보완대책, 재원 조달 방안, 다른 어떤 법적 개정 사항 이런 것들 다 해서 국회로 제출하고

그렇게 비준동의를 하도록 요청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사실 이 협상 결과에 있는 투자 건이 하나하나 결정될 때마다 저희는 사실 재원 조달 방안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투자 건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대책들 아니면 그 개별 투자 건이 가지고 있는 영향평가 결과 이런 것들을 국회 차원에서 저는 건건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브레이크도 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정이 투입되고 국민 혈세가 들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국민의 주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수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다자주의 경제질서라고 하는 게 사실 그런 것을 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WTO 패널을 만드는 어떤 다른 방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비준동의라는 아주 단순한 형태로 국회에서 비준동의 처리하고 나서 가끔씩 업무보고받고 끝냈지만 지금 이런 형태의 협상과 이런 형태의 앞으로 건건이 이루어져야 되는 투자와 그것에 대한 지출은 저는 사실 지금 있는 통상절차법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법적 제도적인 절차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 국회가 그것을 사실 주권적인 차원에서 지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다른 어떤 협상을 할 때도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닌가, 오히려 우리 국회가 더 많은 방안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나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후에 논의를 하면 산자부나 통상본부장님께서도 함께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위원님 하나만 좀 말씀드려야 될까요?

○**장철민 위원**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관련 내용에서 저희들도 고민은 있었는데 그런 재정적인 부분은 저희가 제출하게 될 대미투자 관련 기금특별법에서 그런 내용들을 담고 당연히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MOU가 공개되면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과연 국회의 비준을 받는다, 국내법하고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되는데 상대방은 비준을 안 받고 굉장히 몸이 자유로운데 우리만 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손발을 묶는 그런……

○**장철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비준하라는 얘기가…… 오히려 단순 비준했을 때 복잡함이 더 크고요. 사실 우리는 더 많은 어떤 제도적인 다양성의 불확실성을 만들어 줘야 오히려 건건이 나중에 협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실 때도 그게 편할 거고.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왜냐하면 기델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통상절차는 사실 너무 단순하고 그냥 밀리시면 끝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그 내용 중에도 상업적 합리성 투자 이런 게 사실 되게 데피니션(definition)이 논쟁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건건이 개별 투자 건에서 예를 들면 FS 해 봤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우길 거고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아니고 이런 사안들이 건건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느냐, 어떤 식으로 국회나 국민들은 동의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보완 방안도 저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보면 장관님이나 산자부가 해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야, 이후에 개별 투자 건에서.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뭔가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방안도 그리고 나중에 협의위원회를 하실 때 개별 투자 건에 대해서도 그런 기본적인 상업성에 대한 아규(argument)가 당연히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분명히 이중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나중에—지금 협상 결과 자체는 꽤 고무적이기는 하지만—개별 건에서 쪽쪽 밀려나가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적인 국익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협상 잘됐다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차원의 제도개선안에 대해서, 국회 안에서 당연히 하겠지만 정부와 국회가 함께 의견을 모아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도 지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앞으로 이게 2000억불이라는 3500억불이라는 그 돈이 반드시 우리 국내 기업과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저희 부도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산업부장관님, 아무튼 대미 관세협상 관련해서 무박으로 미국도 다녀오시고 여러 가지 수고 정말 많이 하신 줄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마는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서 결국에는 시간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또 여러 가지 다 끝난 것처럼 수고 많이 하셨다, 축하드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그러기에는 좀 이른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제가 서명을 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박성민** 당연하지요. 지금도 현대기아차는 하루에 269억씩 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민** 지금 7월 8월 9월 3개월에 현대기아차가 거의 3조 가까이 손실을 보고 있는데, 물론 시간을 좀 더 가지고 협상을 해서 더 유리한, 그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우리가 선점할 수 있다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지금 서둘러야 됩니다. 유럽도 EU도 예를 들어 소급 적용을 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또 소급 적용을 한다고 하지마는 한 7000억 정도밖에 소급이 안 된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소급,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출한 달에 부과했던 관세는 환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민** 그러니까 이미 몇조 손실을 봤잖아요. 또 언제 그게 채출이 될지, 법안이…… 그런데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천천히 해도 된다, 물론 무슨 대책이 있으면 천천히 해야지요, 더 좋은 협상이 있으면. 그것도 내놓지 않은데 서두를 필요가 없다, 아니면 축하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문제는 여당·야당 따질 게 아니고 우리 국가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서로 같이 머리 맞대고 또 고민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는 우리 산자위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당·야당 같이 해서 같이 힘을 모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성민**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대미관세 문제는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뭐라도 하고 싶고 또 그렇게 응원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지금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은 좀 제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정의선 회장이 고개를 깊이 숙여서 우리 대통령께 인사를 드렸다 그게 이미 열흘이 지났습니다, 또. 그때 다 된 줄 알았습니다, 저도. APEC 가서 저도 그것 봤습니다.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또 지금 감감무소식입니다. 과연 소급 적용을 제대로 하실 수 있을지 이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협상을 맞추어 가고 있는 게 우리 외환보유고나 외화·자산 운용 능력이 적으니까 그걸 이제 조금 낮추었다 2000억 정도로 낮추었고 그다음에 관세를 15% 정도로 했다, 자동차 관세를. 그게 결국에는 일본이나 EU하고 똑같은 수준 증거입니다, 제가 봐도 관세는.

그래서 당초에 관세는 우리는 일본보다 2.5% 유리한 조건이었는데 오히려 불리한 조건이 됐다 이런 입장인데. 그다음에 투자수익 배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원금 회수할 때까지는 미국하고 우리하고 5:5로 하고 그다음에 회수가 되고 나면 우리가 1, 미국이 9 가져간다, 맞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민** 우리가 지금 2000억 불 투자를 하고 난 뒤에, 284조를 투자하고 난 뒤에 그러면 미국에서는 얼마 투자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미국에서는 특별하게 투자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은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박성민** 우리는 외화도 없는데 284조를 투자해서, 미국은 자기네들 투자 10월도 안 하고 이익에 대해서는 5:5로 나누어 갖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다 수익금을 환수하고 나면 우리가 1, 저기가 9 가져간다, 이것도 국민들을 봤을 때는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어느 분이 조약은 어떻다 어떻다 하는데 이렇게 큰 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국민들이나 기업들에게 최소한 알려야 됩니다. 국회에 보고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러니까 최종 되고 나면 국회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대리 박성민** 어느 정도…… 미국하고 지금 무슨 안보 관계 때문에 보고를 못 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 쪽보다는 전체 내용이 이렇게 안보하고 2개가 있는데 같은데……

○위원장대리 박성민 핵잠수함 때문에 보고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미국 쪽이 지금 정부도 섰다운되어 있는 상황이고 미국 쪽의 절차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민 아무튼 좀 서둘러 주십시오, 장관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위원장 이철규 다음 허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성무 위원 중기부장관님, 이번에 보니까 또 기업 승계 M&A 지원 사업이라는 게 새로 생겼더라고요.

○위원장대리 박성민 잠깐만요. 허성무 위원님 잠깐만요.

의결 좀 하고 하겠습니다.

(박성민 간사, 이철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철규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대체토론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의결정족수를 감안하여 먼저 예산안 관련 안건을 예산결산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의결을 하고 나서 질의 및 대체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예산안과 관련된 안건을 예산결산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및 대체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질의 다시 시작해 주시지요.

○허성무 위원 장관님, 이 사업에 8억 5000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참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면 정확한 데이터가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성무 위원 국정과제이자 제조산업 CEO들의 고령화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데 고령화가 된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이 기업들 중에서 M&A를 시킬 의사가 있는지, 자녀들한테 승계를 시킬 의사가 있는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어서 폐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어서 이미 폐업을 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만 좀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데이터를 아직 가지고 계시지는 않지요, 정확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좀 정확하게 중소기업이랑 소상공인 쪽은 데이터를 좀 고도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승계 관련된 부분 데이터는 지금부터 좀 축적해야 실제 거래가 관련된 부분들의 플랫폼 만드는 것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성무 위원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보여 드리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마 지난번에 제가 대정부질문 할 때도 일부 이 표를 썼는데 23년·24년 2년간, 윤석

열 정부 2년간 우리 제조업 중에서 없어진, 사라진, 폐업한 기업들입니다. 이게 지금 8만 1000개가 없어졌어요. 전체 58만 개 중에 8만 1000개니까 한 13%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지요. 이것은 그냥 재난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중소기업들이 폐업이 됐는데,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고 그중의 일부는 고령 CEO들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계청, 지금은 또 이름이 바뀌었지요, 국가데이터처로.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데이터처, 예.

○허성무 위원 여기 하고 좀 협업을 해 가지고 정확한 자료 분석하거나 아니면 중기부가 스스로 어떤 모델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해서 좀 찾아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인 폐업은 좀 더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심지어 이게 AI 때도 기업 수가 늘어났는데 23년·24년에 이렇게 엄청나게 줄었고, 올해 25년에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데이터 기반으로 잘 좀 파악을 해 주십시오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러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장에서 가 보면 저희들 다 국가산단이 있고 이렇게 1세대들이 보면 대개 70대 후반이나 80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싶어 해요, 대부분이. 그게 안 되면 그냥 폐업할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자녀들한테 많이 물려주고 싶어 하니까 정부에서 대책 내놓은 게 중기부가 가업상속공제제도하고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이런 다양한 제도를 냈는데 실제 이 제도의 혜택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 이 혜택을 본 중소기업도 노령화된 CEO들의 기업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데이터도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실시간 파악은 어렵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렇지요. 그냥 국세청의 자료를 받아 보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허성무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중기부가 자료 축적하고 데이터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하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정책의 실효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제도에 따라서 가업상속공제제도 그다음에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이것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어느 기업들이 봤는지 이런 것 좀 조사해서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도 좀 보고도 해 주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협의……

○허성무 위원 데이터처 좀 활용도 하시기를 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러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다음에 그림 하나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고령사업주의 인식개선사업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8억 5000 중에 1억 5000이 이게 지금 편성돼 있는 것 아닙니까. 세 차례 설명회 한단데. 그러면 고령사업자들 지금 저기 보시면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된 사람

들 보니까 52%가 창업자고, 과업을 승계한 데가 37%, 38% 가까이 되고요. M&A를 통해서 한 데는 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거지요. 앞의 통계를 보면 결국 가업승계가 모두가 바라고 있는데 이걸 M&A로 넘겨주려면 인식개선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제도도 그렇지만 이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분들도 있으나 사실 제삼자 M&A도 있고 일본의 경우는 이 부분이 제일 자리가 잘 잡혀서 중소기업의 고용승계라든지 기술이 보전된다든지 하는 사회적 자산이 보전되는 것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잘 준비하고 그리고 데이터 부분은 지금부터 누적해야 앞으로 더 좋은 M&A 관련된 부분들이나 승계 관련된 부분들 계획들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허성무 위원 그래서 저는 M&A를 통해서 CEO가 된 2.5%가 한 25% 이상 올라와야 이게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기업이 자산이 그대로 보존되면서 승계돼 나가는 그런 구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실하게 좋은 제도를 도입하셨는데 실효성 있게 잘 되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저희가 중소기업 기술 관련된 부분에 좀 기보 통해서 M&A 승계 플랫폼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기술도 보전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지금 사실 저희가 중소기업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데 이 플랫폼에 등록되면 관련된 부분의 데이터도 계속 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경써서 저는 주의 깊게 제대로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성무 위원 그렇습니다. 제조업이 끝없이 사라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정책을 채택했다고 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셨던 8만 개의 폐업한 기업들의 상황 그리고 어떤 업종에 있었던 건지 하는 부분들도 사후적으로나마 데이터 봐서 미리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 소상공인 관련해서도 미리 대응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중소기업도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허성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구미갑의 구자근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좀 좋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원전 수출 관련해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UAE의 바라카 원전하고 이집트의 엘다바 원전을 다녀왔는데 지금 바라카 원전은 상업 시운전을 거쳐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엘다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쪽 국가들로부터 대한민국 원전 건설에 대한 감사함, 고마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 효과로 인해서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방산이나 우주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확대가 기대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지금 국내 수출 원전은 가 있

고, 우리는 수출은 지금 산업부에서 맡고 있는데 국내 원전 관련해서 여기 가 보면 1500억·80억 이 정도 되어 있는 기후에너지부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중복적으로 원전 수출 관련해서, 지금 계속 원전 수출 관련해서 확대 기반 마련한다, 해외지사 설립한다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오히려 이 정부에서 줄속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하다 보니까 칸막이만 더 생기게 된 결과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것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향후라도 이 부분을 신중하게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드립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구자근 위원 그리고 지금 비준동의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국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지금 건국 이래 최대의 재정 부담이, 지금 한화로 매년 예를 들어 약한 300조 정도가 10년 동안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당연히 저는 여당인 민주당에서 이걸 국민들 동의를 얻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비준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제가 똑같이 되돌려 주자면 2016년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가 간 협의는 문서로 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한일 정부 간에 그때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비준동의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우리가 여당이고, 우리가 다수당이고 숫자도 우세하니까 그냥 밀어붙이면 되지 이렇게 가면 저는 국민들로부터 오만한 모습의 민주당으로 비쳐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대미협상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주가 지났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팩트시트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여당 위원님들과 야당 위원님들의 온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정부 책임 있는 관계자가 내는 목소리, 발언은 일관되고 좀 신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김용범 실장이 10월 29일 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 끝나고 나서 2~3일 후면 안보 포함해서 결정될 거다’.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 국회운영위에 나와 가지고 11월 6일 날, ‘이번 주에 다 결정된다, 끝날 거다’. 뭘니까, 이게? 그런데 대통령은 오늘 관세협상 큰산 넘었다고 이야기하지요. 끝났다고, 거의 결정됐다고 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아까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이 물을 때 다들 답변 회피하시면서 ‘관세협상 중이라서 이야기를 못 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정부, 용산 쪽에서는 다 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청찬일색으로 여당 위원들께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여당 위원들한테는 따로 보고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따로 보고한 것은 아닙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관은 아직까지 관세협상이 끝나지 않아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이나 용산에서는 거의 다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맞지 않는 목소리가 언론에, 시중에 그렇게 나오니까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기업들이 방향성을, 기준을, 계획을 잡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 관계자들은 언론에 내는 목소리는 좀 신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RE100 산단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 책정되어 있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구자근 위원 261억이던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업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이것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가 사업추진이 줄속입니다, 줄속. 지금 이것 어디에다 조성하는 겁니까? 공모합니까? 어디에 조성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일단 법이 통과가 되면 법에 따라서 시범단지를 선정해서.....

○구자근 위원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나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의원 입법을 통해서 발의할 예정입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공모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모할 거잖아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구자근 위원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속에 보면 새만금 RE100 산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지자체들, 예를 들어서 영암·해남·무안 다 들리리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렇지 않습니다.

○구자근 위원 아니, 총액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조 단위가 될지 어떻게 모르지 않습니까? 어디에다 어떻게.....

이게 뭡니까? 기본계획, 실시계획, 근거 법령도 없고 그냥 돈부터 넣고. 거기다가 해외 가는 것, 해외 홍보활동비, 위원회 운영비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 그냥 통으로 261억을 넣어 댔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예산소위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예산소위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 위원 장관님, 오늘 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좀 받았습시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부장과 관련되어서 뿌리산업으로서 중요성, 그리고 희귀광물의 대 중국의 의존도가 강화되는 것과 관련된 공공망 다변화, 그리고 기술개발의 중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이 소부장산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모두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은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주셨던 소부장 기본계획, 앞으로의 로드맵을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중요성 또 정책적인 비중을 두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술개발만큼 중요한 것이 사실 사업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 17쪽에 보면 사업화할 수 있도록 개발제품의 신뢰성 평가 및 수요기업의 양산 테스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물론 이 정부예산을 꾸미는 실질적인 작업이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하기 이전에 상당

한 실무작업이 이루어졌고 또 이 기본계획은 지금 현시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간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전 정부다, 현 정부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산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 매커니즘을 맞춰 줘야 되거든요. 사업화를 앞둔 소부장기업의 실제 양산라인 등에서 평가검증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매우 중요한데 올해 450억 원인데 내년도에 보니까 250억 원으로 오히려 감액이 됐어요. 어쨌든 정부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예산부서에서의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뭔가 제자리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조를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평소에도 이재관 위원님 소부장 관련해서 계속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이걸 보고 이걸 다시 증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라는 생각도 들고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리고 기술신뢰성 평가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규 과제가 새롭게,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신규 과제의 그런 부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지가 않거든요. 내역사업들을 보면 사실 이 사업도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전년도와 현재, 내년도의 사업내용이 차이점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소부장 기업들의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출확대라든지 고용창출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예산이라고 하는 한계로 인해서 삭감을 해야 되는, 줄여야 되는 그 어떤 명분도 저는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중기부장관님, 그리고 사이버 해킹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위원님.

**○이재관 위원** 그런데 저도 이것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중기부의 산하기관 보안관제와 관련되어서 지금 국정원 등에서 보안관제에 대해서 1선, 2선, 3선 이렇게 보안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 산하기관의 보안시스템 특히 중기부의 보안시스템은 이번에 알았습니다.

특히 기술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중요한 데이터들이 상당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기관 못지않게 보안관제시스템이 강화가 되어야 되는데 신용보증금이라든지 한국주택금융공사라든지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라든지 하는 타 부처 금융기관들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정작 중기부 산하기관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위원님 지적 주셔서 내용 파악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관제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24시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분 저희도 잘 챙겨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재관 위원 꼭 좀 완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이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 충남 홍성·예산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장관님, 7월 31일 날 대미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 중 현금투자는 5%에 불과하다’ 이렇게 밝혔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장관님도 대부분 보증이나 대출이나 펀드 이런 것들 등으로 구성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10월 26일 2차 타결에서는 2000억 불은 현금투자고 1500억은 마스가다 이렇게 했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강승규 위원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통상교섭본부장 보고에서 보니까 당초 3000억 불에서 투자가 2000억 불로 43% 축소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교섭본부장, 맞지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강승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초 3500억 현금투자로 결정됐었는데 2000억불로 현금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43% 줄어들었다는 그 얘기로 이해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처음에 몇 번 제가 말씀드렸……

○강승규 위원 아니, 통상교섭본부장님 보고내용에 그랬잖아요, 어떻습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맞습니다.

○강승규 위원 맞지요? 그러면 김용범 정책실장이 말한 것과 지금 다르잖아요, 산자부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틀려요, 맞아요? 김용범 실장은 3500억 불 중에서 현금투자는 5%에 불과하다 그랬는데 지금 김용범, 통상본부장이 보고한 것은 3500억 불 중에서 투자는 2000억 불로 43%가 줄었다 그러면 지금 모수가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협상의 결과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최종 결과적으로는……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1차 협상에서는 그렇게 협상했는데 2차 협상에서 더 물러난 거네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아닙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그렇게 합의를 했다가 협상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된 게 미국이 그런 협상과 다르게 3500억 불을 현금투자를 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2000억 불로……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팩트 체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면 현금투자는 5% 밖에 안 되는 것으로 타결을 했는데 2차에서 더 물러선 거네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아니지요. 처음에 했던 MOU 안에 3500억 불 현금투자해 달라고 와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강승규 위원 1차 협상에서 3500억 불 중에서는 현금투자가 5% 밖에 없다면서요. 김용범 실장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 내용을 내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것 맞아요, 안 맞아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 당시 처음에 협의할 때는 현금과 대출과 대출보증으로 되어 있고 주로 대출과 대출보증이 주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2차에서 물러선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국이 3500억을 다 현금으로 요구했던 말건 여하튼 2차 협상에서는 1차 협상보다 물러섰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협상력이라고 이게 어떻게 현금이 5%에서 2000억으로 대폭 늘어나는데 어떻게 잘됐다는 거냐 이거지요.

그다음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일본이 5500억 불 중에서 국내법 등으로 인해서 실제 현금투자는 1%~2%라고 일본 협상대표가 말했는데 그건 맞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아닙니다. 일본도 5500억 불이 전액 현금투자입니다.

○강승규 위원 전액 현금인데 국내법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 재원조달에서는 현금은 1~2% 밖에 안 되고 다 일본의 은행 등이 투자보증 등을 할 거다 이렇게 신문에 다 나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했는데. 그것 틀린 해석이에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것과 상관없이 미국에 전액 현금투자를……

○강승규 위원 전액 현금한다는 그건 나도 아는데 재원조달 방법에서 그렇다니까요. 그것 맞아요? 일본의 재원조달 방법이 현금이 아니고 투자은행 등이 투자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현금투자가 1~2% 밖에 안 된다. 일본 국내법상 일본 재정으로 현금투자를 할 수 없다 그건 맞아요, 틀려요? 다르게 해석해요? 신문에서 전문가들이 잘못 분석하는 거예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의 내용과 저희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본이 5500억 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것은 일본의 사정에 맞춰서……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재원조달 방법이 투자 현금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현금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걸 왜 계속 말을 돌려요? 전문가들은 밖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장관님은 계속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강승규 위원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기준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일본의 5500억 불하고 2000억 불은 동일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승규 위원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5500억 불과 2000억 불은 동일하게 현금투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승규 위원 현금투자인데 재원조달은 국내법에서 미국에서 현금을 넣을 수 없더라

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내가 몇 번 얘기를 하는데 그걸 모르는 척을,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척을 하고 있어요. 그것 다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문지상에 다 나와 있는데.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나중에 한번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왜 못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 투자자들, 전문가들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국내 투자자들이 정의가 아니라 일본의 아카자와 대신이 그렇게 발언을 해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냐고요?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건 일본 사정에 따라서 일본 대신이 발언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강승규 위원 일본 사정은 뭔데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일본 나름대로 5500억 불을……

○강승규 위원 아니, 양국의 국내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일본의 MOU 내용에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우리는 국내법이 그런 게 없잖아요. 일본의 현금으로 투자할 수 없는 조항이 우리 국내법에 있어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내법에 따라서 적용을 한다는 건 똑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국내법에 없고 일본은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현금투자를 1~2% 밖에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방어장치가 있다라는 밖의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왜 그것에 대해서 계속 평가를 안 하고 우리하고 똑같다고만 그래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아니, 그런데 그냥 생각을 했을 때 5500억 불을 1~2% 해 가지고 보증을 한다는 의미가 타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러면 일본 대신은 그 협상, 지금 장관까지 가는데 협상 대표는 거짓말한 거냐고…… 제가 그건 맞지 않다는 얘기냐, 아니냐고 묻잖아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5500억 불을 1~2%를 대출을 해서 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강승규 위원 아니, 통상협정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우리도 이 협정이 잘됐느냐, 비준을 해야 될 것이냐,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것이냐고 따지는데 그게 상식적인 얘기가 어디 있어요, 나라의 운명이 왔다갔다 하는데.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일본과 저희가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승규 위원 일본과 무슨 내용이 같아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MOU상의 내용이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국내법이 다르잖아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도 그래서 2000억 불에 대해서 대미 기금 투자를……

○강승규 위원 그러면 우리는 국내법으로 200억 불을 현금으로 투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현금 투자한다면서요, 200억 달러로 데드라인 쳐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래서 저희가 대미 투자 관련된 기금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지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강승규 위원 지금 우리 정부가 대미 관세협상 어렵다는 것도 알고 저희들도 야당이지만 정부가 잘하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계속 말이 달라지고 국민들 속이고 뭔가 내용들을 진실을 얘기 안 하고 국민들 눈만 속이려고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제가 그러니까 계속 따지는 거예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나중에 보게 되시면 알 것 같습니다.

○강승규 위원 장관께서도 나중에 안다고 하지만 지금 MOU나 팩트시트, 날짜, 그런 것은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러시지만 계속 내용이 바뀌어요, 이 입장에서는 이 얘기 하고 저기에서는 저 입장 얘기하고. 지금 1차 협상에서 한쪽에서는 120% 협상이 잘됐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대통령 탄핵될 것 같다고 하더니 지금 와서는 그 협상이 결국은 봄에 2차 협상에서 더 영망이 된 협상이잖아요, 실제.

○위원장 이철규 정리를 해 주시지요.

○강승규 위원 예.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곽상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상언 위원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입니다.

한성숙 장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오랜만입니다.

장관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혹시 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알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소상공인이 고용보험 관련해서 가입을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곽상언 위원 그렇지요. 저도 과거에 변호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알았으면 저도 신청할 걸 그랬어요.

실제로 1인 기업, 그러니까 말이 좋아 1인 기업이지 1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폐업하고 난 다음에 생활이 안 되는 경우가 매우 많거든요. 실제로 이런 제도가 필요한데 이 제도의 집행 실태를 보게 되면 실제로 1인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지 등이 매우 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몰랐으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시작은 2018년도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1인 자영업자만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으로 했었는데 2023년도부터는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박상언 위원** 내용을 보게 되면 소상공인이 납부한 보험료 8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고 최대 5년간 지원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이 정도면 흡족한 정도의 수준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수준을 확대하거나 그 기간을 확대하거나 해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 부분은 좀 봐야 하는데요. 5년이 지나고 나면 또 해제도 좀 있고 해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기간을 좀 늘리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거나 다른 부분의, 노란우산공제 기능을 좀 강화하거나 여러 부분을 노동부랑 좀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상언 위원** 중소기업부에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박상언 위원** 노란우산공제의 경우에는 가입률이 매우 높는데 지금 이 제도는 거의 가입률이 낮아서 그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박상언 위원**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전체 소상공인 중에서 지금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혹은 이 가입률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지 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지금 증가도 굉장히 낮고 가입되어 있는 소상공인 숫자도 굉장히 적은 상황입니다.

○**박상언 위원** 제가 한번 알려 드릴게요. 이게 시작된 것은 2018년도인데 2018년도에는 1만 7300명가량이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2021년, 그러니까 3년 후에는 거의 2배가 됩니다. 3만 5000명가량이 되고요. 그리고 2024년, 작년의 경우에는 5만 1000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5만 명 정도 됩니다.

○**박상언 위원** 그러니까 2018년에 비해서 거의 3배가량 늘어난 것이지요. 그러면 실적으로는 매우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수치상으로 보면. 그런데 전체 소상공인이 약 600만 사업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박상언 위원** 그중에서 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매우 낮아요. 2018년에서 지금까지 비율을 보게 되면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료를 지원한 인원,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에서 지원한 사람 비율은 또 매우 높아요. 2018년에는 14%에 불과한데 2024년에는 무려 60%가량에 이릅니다. 아마 그래서 고용보험료를 많이 지원했다고 홍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체 사업자 중에서 가입한 사람이 1%도 안 되는,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0.77%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전체 소상공인의 숫자 대비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은, 1%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너무 적고요.

○**박상언 위원** 매우 적지요. 홍보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올해 이 사업 예산, 그러니까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예산이 148억 원가량인데요. 그중에서 실제 집행하는 집행률이 37%밖에 안 됩니다. 절반도 못 쓴 것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곽상언 위원 절반도 못 쓴 것인데 지금 고용보험료 지원 인원은 60%라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하고는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실제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특히 1인 자영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좀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이 내용 보고 사실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알고 있는 분들이 적고 또 예산 확보 대비해서 지금 불용되어 있는 부분들이 높아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되면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곽상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 예산의 3분의 2가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니까요 그 배정된 예산이라도 집행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곽상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권향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엽 위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 권향엽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오류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오늘 산업통상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통상부’로 됐는데 13페이지 보시면 ‘정부조직법 제38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었지요. 정부조직법 제38조는 국가보훈부에 대한 규정이고요 산업통상부는 정부조직법 41조입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오류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장관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권향엽 위원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째입니다. APEC 성공, 그동안의 한미 통상, 관세협상 합의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미국 철강의 품목관세 50%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낮추지를 못했습니다.

장관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미국이 자국 철강산업 보호에, 철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예외 없이 지금 50%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우리 조선이든 우리 철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조금 더 방안을 더 뚫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미국도 철강을 국가 안보의 필수적인 핵심 물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러스트 벨트 지역의 철강 노동자들의 표심이 정치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관님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권향엽 위원 미국도 한국처럼 철강이 산업의 쌀이고 자동차, 조선, 기계장비, 전기전자 같은 주요 제조업이 철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 산업 부분은 어떤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것인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는 일단 네 가지 부분을 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잉 품목에 대한 설비 조정 이슈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통상 방어,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슈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부가가치와 저탄소에서 경쟁력을 올리는 품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의 상생협력, 4가지를 크게 중점을 두고 가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장관님, 작년 12월 23일에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개월이 지났지요. 그런데 구조조정은 잘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들이 지금 세 지역 가운데 대산 1호가 일단 먼저 앞서나가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여수·울산까지 그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당시에 사업 재편이 시급하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것 같아요.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기업들의 반응이 좀 여의치 않습니까? 어떤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기업들은 좀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업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기업들에 맞는 구조조정안도 만들고 지원 방안도 만들기 위해서 같이 협업해서 가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경제부총리께서도 지난주에 사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재편에 대해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고 골든타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잘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권향엽 위원 정부가 선 자구노력, 후 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데 기업이 먼저 자구안을 만들면 정부가 만기 연장, 금리 인하 등의 금융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일본처럼 정부가 강제적인 구조조정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장관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일본은 구조조정하는 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저희는 지금 1년 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일본에 비해서는 빨리 간다고 하는데 저희가 시급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권향엽 위원 하여튼 우리가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도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이번 방안에 대해서 업계의 의견은 혹시 좀 들어 보셨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업계 의견을 반영해서 업계하고 같이 지금 만들었습니다.

○권향엽 위원 수소환원제철 전환 로드맵을 만들고 고부가 제품으로서 전환을 명시화하고 있는데 중장기적 계획 못지않게 단기적 처방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안입니다.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을 위해서 철강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위원님 초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철강은 우리 산업의 근간이자 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인식하에서 준비를 하고 위원님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권향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웅 위원** 장관님, 제가 오늘 마지막 질의자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 짓는 질의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간의 관세 협약은 체결되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체결이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인 틀은……

○**박상웅 위원** 체결된 것 아니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사인은 아직 안 했습니다.

○**박상웅 위원** 팩트시트도 없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박상웅 위원** 확정된 것은 없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렇지요.

○**박상웅 위원** 그런데 국민들은 다 체결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아주 쾌거라고 박수를 칩니다. 우리는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화자찬만 난무했던 지난번 한미정상회담, 3~4개월 전에 있었던 것하고 이번 APEC 때의 협상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을 모릅니다. 제가 국회의원인데 그 내용을 모르니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모르겠습니까?

지금 팩트시트가 나온다고 말을 한 지가 벌써 2주가 다 돼 갑니다. 지금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런 와중에 아시다시피 국내 자동차업계만 하나 보더라도 하루에 4000대 가까운 수출 차량에 여전히 대미 관세는 2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 같고 아까 어떤 위원은 좀 여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라 했지만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은 왜 그렇게 서둘러서 APEC 때 이 관세협상을 체결을 했겠습니까? 왜 이들은 MOU를 발표하고 팩트시트를 발표하고 그렇게 서둘러 이것을 매듭지었겠습니까? 이게 시간을 질질 끌면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3분기만 하더라도요 자동차 산업에서 현대차가 1조 8000억 원, 관세로 인한 손실이랍니다. 기아가 1조 2000억 원입니다. 합하면 3조 원이에요. 이걸 만약에 4/4분기로 곱하면 12조라는 금액이 예상이 됩니다. 자동차 업계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200억 달러를 한도로 해서 10년간 메꿔 나가면 2000억이 된다고 계산을 하는데 그 200억 달러가 우리 돈으로 약 29조입니다, 현재 환율로 대충 계산해도. 그러면 29조에 메꿔 넣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산업계에서는 자동차 업계만 하더라도 1년에 12조라는 관세로 인한 피해액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전체 산업까지 확산시켜 볼 때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빨리 결

정해야 된다.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이 아시안 정상회의 중에 바로 MOU를 발표한 나라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입니다. 28일 날 정상회담에서는 미국, 일본이 그 회담 끝나고 바로 당일 날 공동 성명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31일 날 정상회담 하고 바로 다음 날 팩트시트까지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이 협상이 잘 됐다고 박수 치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이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가 한미동맹이다, 끈끈한 혈맹관계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일정 부분은 느꼈지만 과거의 그런 끈끈함보다는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박상웅 위원 솔직히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에 대한 어떠한 깊은 신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 말은 우리 쪽이 아니라 미국 쪽이 동맹 관련해서 과거보다는 동맹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자국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박상웅 위원 저는 다른 나라의 외교 상황은 장관님이 알 수도 없고 알 위치도 아니고 하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느낀 것을 제가 여쭙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국회 비준 문제를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지금 우리가 연간 29조 원 그다음에 기타 투자 형식으로 나가는 돈만 해도 국고 유출이 단군 이래 이렇게 큰 유출을 강요받은 협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게 MOU다 뭐다 이렇게 모호한 표현을 써 가면서 미국 핑계대고 미국은 MOU니까 국회 비준·동의를 안 받아도 되니까 우리도 안 받아도 되겠다? 우리나라 법에는 그렇지 않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헌법 제60조, 통상조약법 제13조를 보시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도 국민이 이 협상 내용에 대해서 팩트를 모르고 있으니, 더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고 결백하다면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비준·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도 9월 16일 날 대정부질문 때 김민석 총리가 국회 동의를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도 국민과 국회에 소상히 보고하겠다고, 보고 해서 뭘 하려고요? 보고해서 이해를 구해야지요. 기재부 국정감사 13일 날 민주당 의원들은 외환 보유고를 대외적으로 투자할 때는 국회 동의를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말 바꾸기를 하고 국민을 현혹시키고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주무장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중심을 잡고

당당하게 가십시오. 장관 그것 뭐 10년, 20년 할 겁니까? 이런 단군 이래 최대의 국가적인 대외 투자 문제를 놓고 당당하게 가십시오. 나중에라도 박수받을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위원님 중언 진짜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비준 이슈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조금 더 복잡한 이슈는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재정적인 부담 관련된 부분들은 대미 투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법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장관님이 11월 3일 날 중견기업 CEO 오찬 때 가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했다, 그래서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정책을 좀 밀고 나가면서 대답을 회피하거나 또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피한 것 같은데 최근에 법무부장관이요 검찰 항소 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라는 말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신중하게 판단하라,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장관 스스로가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말속에, 이런 중요한 대외 투자나 이런 협정에 있어서 큰 오류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모든 산자부와 통상 관련 종사자들이, 책임자들이 그 모호성에 빠져 가지고 국민에게 책임을 정확하게 지지 않는 그런 역사에 나쁜 오점을 남길 수 있을까 우려됩니다. 깊이 명심하고 분명하게 하십시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박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몇 가지만 좀 확인하고 당부할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협약이나, MOU의 방식으로 할 거냐인데 MOU 방식으로 간다는 게 정해진 건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양국 간에 그렇게 MOU로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 두 번째, MOU로 하자 했다는데 이걸 지난번에 여러 차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또 정부에서도 국회에 보고를 하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취지로 계속 국민들에게 알려 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 국회의 동의를 필요 없다 이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뭔가 숨기는 게 있나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MOU가 작성되면 이 문안의 전문을 다 공개할 겁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공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하나도 빠짐없이?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위원장 이철규** 일본과 미국 양국 정부 사이의 MOU는 완전히 공개가 됐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일본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어로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일본어로 공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해 가지고 이것을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특정 국가가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일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본의 MOU 문안이 전부 다 공개가 됐는지, 완전 공개가 됐다면 그 원문과 번역본을 한국어로 번역해 가지고 위원장실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 협상을 하면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일본은 5500억 불 우리는 3500억 불, 단순 규모로 보면 우리가 작은 것 같지만 경제 규모라든가 외환 보유고를 고려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과도한 부담을 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야당 위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면 이걸 가지고 7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진실이 뭐냐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말이 바뀌니까 우리가 당장에 여러 가지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확정되지 않은 사안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발표하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되겠는가.

또 협상은 상대가 있는 겁니다. 상대가 볼 때 조금하거나, 외나무 다리를 건너갈 때 중간에 물 위에서 마주치면 힘이 센 사람이 밀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급한 사람이 밀고 가겠습니까, 느긋한 사람이 밀고 가겠습니까? 이게 협상의 기술이에요. 이재명 정부가 한미 관계가 견고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뭔가 빨리 조금하게 결과를 도출하려고 급해 있구나, 협상의 카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래서 저는 우리 국익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재촉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국익에 손해 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게 두고두고 이 당시의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정부 부처에서 이런 실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나중에 훗날에 역사에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한미 간 FTA를 체결할 때 많은 분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FTA 체결이 얼마나 탁월한 선택이었고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다시금 우리가 평가하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당시에 그것을 결국 못 했다면 우리가 두고두고 후회하고 역사의 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여기에는 한 치의 숨김도 없이 보고를 하고 공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익에 손상이 가는 일이 없도록 단단히, 문구 하나하나도 철저히 점검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의 상공회의소의, 미상의의 아시아 담당 수석부회장이 다녀갔습니다. 미국 상의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반대한다고 성명을 내고 소송을 하는 데 동참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또 한국도 국내에서 미국 정부가 생각할 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했을 때와 대한민국의 야당이 이것을 문제 삼고 국내 정치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아마 우리의 협상력이 커질 겁니다. 이 정도만, 답변을 듣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기부장관님,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올해도 보니까 내년 예산에 소상공인 제도전 뒷받침이라 해 가지고 예산이 대폭, 금년도에 2450억에서 내년 안에 3056억으로 한

25%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의 탈출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폐업을 하고 다시 재창업한다? 이미 실패한 사람이 재도약할 수 있게 해 주는데 꼭 그 사람이 창업을 해야만 됩니까? 우리는 자영업이 너무 과도합니다. 점포 철거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좋은데 이것을 다시 다른 사업으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데 인테리어 비용으로 들어가는 이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새로이 들어가 신규 진입하는 시장의 질서를 왜곡시키고 우리 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일이 되니까 철저히 이 예산을 집행하되, 이 실패한 사람이 왜 자영업을 꼭 해야만 됩니까? 자영업을 하더라도 다른 경쟁 시장의 질서를 왜곡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 들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리고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가 지금 우리가 이 지식재산이 얼마나 중요하다 이런 인식하에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격상이 된 것 아닙니까?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리고 일부 업무도 가지고 왔지요?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이관돼 왔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이관돼 오고, 기능도 오고 예산도 일반회계로 들어갔던데?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

○위원장 이철규 그런데 금년과 내년도 예산을 보면 차이가 없어요.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산 편성 이후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단순히 예산 편성 이후에 지식재산처로 확대됐으니까 없다고 아니라 지식재산처든 특허청이든 간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얼마나 큼니까? 우리 국민들 또는 기업이 해외에 나가 가지고 무한 경쟁을 하는데 현지의 지식재산권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몰라 가지고 당하는 침해소송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걸 뒷받침, 국내에 그러니까 이 특허청 지금 지식재산처가 정치적 발언권이 없다 보니까 사실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어느 게 국익에 더 큰 이익이 걸렸는지를 사실은 정부나 국회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표가 많으니까, 소상공인들 많고 하니까 그쪽에 무더기로 쏟아 붓는 재정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즉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중에 대외 관계에서 수출하는 기업들 그리고 해외로 세계 무대를 향해서 뛰는 우리 기업들·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재산처의 업무가 많을 텐데 그런 걸 더 발굴하고 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입안해 주기 바랍니다. 초대 처장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하는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다음에 김정관 장관님, 반도체 문제에서 우리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겠다, 불리하지 않은 처우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최혜국 대우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일종의 최혜국 대우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런데 이것이 명시적으로 이 협약에 들어갑니까, 이번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대만과 유사한 수준으로 하겠다는 게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철규 아니, 대만과 유사한 수준이 아니라 이것 문안을 지금 작성 중이고 아직도 협상이 끝난 게 아닌데 끝났다고 자꾸 하다 보니까, 협상이 안 끝났으니까 발표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반도체 문제 또 다른 상품도, 자동차는 지금 15% 미만이 없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위원장 이철규 영국인가 영국이 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영국이 10%로 돼 있는데요.

○위원장 이철규 영국이 10%인가 한영 쿼터가 있는 곳 외에는 15% 이하가 없는데, 사실은 2.5%만큼 우리가 더 낮은 관세를 부담하는 게 맞겠지요? 단순히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경쟁 국가들의 관계를 봐야지요. 우리는 FTA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우리도 미국의 상품과 용역에 대해서 세금을 못 물리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관세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이라도 우리가 미국이 우리 FTA를 체결한 국가였는데 할 때 적어도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서 대한민국이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규정을 반드시 반영시킵시오. 그게 우리 장관과 정부가 해야 될 최소한의 도리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반드시 최혜국 대우는 일반 상품과, 나머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라구요.

하여튼 이상으로 대체토론과 내년도 예산안 그다음에 예타 면제사업 보고, 2차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및 통상현안 등과 관련한 보고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회부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깐 앉으세요.

장철민 예산결산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11월 13일과 14일 양일간 개최되는 소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잘 심사하셔서 그 결과를 11월 17일 14시에 개최 예정인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한 위원님이 계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강승규 위원님, 박상언 위원님, 구자근 위원님, 권향엽 위원님, 김동아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김원이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박상웅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송재봉 위원님, 오세희 위원님, 이언주 위원님, 이재관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정진욱 위원님, 허성무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해당 기관은 일주일 내에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을 비롯한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 소위원회            | 위원명                              | 교섭단체                     |
|-----------------|----------------------------------|--------------------------|
|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10인) | 곽상언<br>권향엽<br>김원이<br>김한규<br>송재봉  | 더불어민주당(5)                |
|                 | 박상웅<br>◎박성민<br>서일준<br>장동혁        | 국민의힘(4)                  |
|                 | 김종민                              |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
| 중소벤처기업(9인)      | 김동아<br>◎김원이<br>오세희<br>이재관<br>정진욱 | 더불어민주당(5)                |
|                 | 강승규<br>구자근<br>김성원<br>정동만         | 국민의힘(4)                  |
| 예산결산(10인)       | 권향엽<br>김동아<br>오세희<br>◎장철민<br>허성무 | 더불어민주당(5)                |
|                 | 강승규<br>구자근<br>박상웅<br>정동만         | 국민의힘(4)                  |
|                 | 김종민                              |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



| 소위원회     | 위원명               | 교섭단체      |
|----------|-------------------|-----------|
| 청원심사(5인) | 김동아<br>이연주<br>전재수 | 더불어민주당(3) |
|          | ◎서일준<br>장동혁       | 국민의힘(2)   |

◎표시는 소위원장임

## ○출석 위원(21인)

강승규 곽상언 구자근 권향엽 김동아 김성원 김원이 김종민 김한규 박상웅  
박성민 서일준 송재봉 오세희 이연주 이재관 이철규 장철민 정동만 정진욱  
허성무

## ○청가 위원(2인)

김성환 전재수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전문위원 성소미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통상차관보 박정성  
기획조정실장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김성열  
통상교섭실장 권혜진  
무역투자실장 강감찬  
산업공급망정책관 나성화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제경희  
지역경제정책관 김규성  
자원산업정책국장 윤창현  
원전전략기획관 양기욱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최진혁  
다자통상법무관 오충종  
투자정책관 유법민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 전용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기획조정실장 김우중

중소기업정책실장 박용순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원영  
중소기업전략기획관 김정주  
글로벌성장정책관 이순배  
지역기업정책관 권순재  
창업정책관 조경원  
벤처정책관 김봉덕  
소상공인정책관 이대건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 황영호  
상생협력정책국장 김우순  
지식재산처  
처장 김용선  
기획조정관 구영민  
지식재산정책국장 김정균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 신상곤  
지식재산정보국장 정재환  
한국가스공사  
사장 최연혜  
한국석유공사  
기획재무본부장 최문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경영부사장 전대욱  
한국전력공사  
기획부사장 오홍복  
(주)강원랜드  
부사장 최철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경영전략본부장 진수남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황영식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장영진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 박주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박성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강석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강경성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사장 이수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민병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전윤종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이상훈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최춘식  
대한석탄공사  
사장 김규환  
무역안보관리원  
원장 서정민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윤상흠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제조로봇본부장 류지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획조정본부장 송현규  
한국세라믹기술원  
원장 윤종석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원장 서순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 유경민  
(주)공영홈쇼핑  
상임이사 김영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무이사 박준영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박마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 김영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이태식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 조주현

창업진흥원

원장 유종필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이대희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김시형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경영혁신본부장 손창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 최규완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원장 김명섭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원장 윤병수

한국특허정보원

원장 현성훈

#### 【보고사항】

#### ○의안 회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4.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1)

9월 25일 회부됨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2025. 9. 22.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61)

9월 29일 회부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9.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4)

9월 30일 회부됨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2)

10월 1일 회부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4)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31)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3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34)

이상 5건 10월 2일 회부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0.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0)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0.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1)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0. 10.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1)

이상 3건 10월 13일 회부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3.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5)

10월 14일 회부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4.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84)

10월 15일 회부됨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6.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22)

10월 17일 회부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7.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3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7.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36)

이상 2건 10월 20일 회부됨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8)

10월 22일 회부됨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2.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6)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2.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0)

이상 2건 10월 23일 회부됨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3.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6)

10월 24일 회부됨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5. 10. 27.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0)

10월 28일 회부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8.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9)

10월 29일 회부됨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10. 30.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3)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0. 30.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30.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6)

이상 3건 10월 31일 회부됨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0. 31.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8)

11월 3일 회부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4.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81)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1. 4.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4)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1. 4.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9)

이상 3건 11월 5일 회부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5.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5)

11월 6일 회부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6. 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2)

11월 7일 회부됨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1. 7.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2)

11월 10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9. 25. 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87)

9월 2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2025. 9. 26.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0)

9월 2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0.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8)

10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미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요구 철회 및 한국 노동자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2025. 9. 25. 이재강 의원·윤종오 의원·김준형 의원 등 65인 발의)(의안번호 2213292)

10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0. 2. 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1)

10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0. 22.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3)

10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2025. 10. 27.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2)

10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4.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82)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2025. 11. 4.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7)

이상 2건 11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7.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12)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와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1. 7.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0)

이상 2건 11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 구분      | 대통령령 | 부령 | 총리령 | 훈령 | 예규 | 고시  |
|---------|------|----|-----|----|----|-----|
| 산업통상부   | 53   | 40 | -   | 24 | 4  | 302 |
| 중소벤처기업부 | 25   | 15 | -   | 32 | 4  | 81  |
| 지식재산처   | 5    | 12 | 2   | 21 | 5  | 40  |